

9·24 이후 기후운동 전망(방향) 토론회

- 일시 : 2022년 11월 8일(화) 오후 2-6시
- 장소 : 성프란치스코회관 2층 / 인터넷(유튜브) 중계(924 기후정의행진 계정)
- 주최 : 9월 기후정의행동 조직위원회

프로그램

1부(14:00 - 15:20) 9·24기후정의행진의 성과, 의미는 무엇인가?

- 사회 : 이오이(기후위기비상행동 운영위원장)
- 발표 : 9·24기후정의행진의 성과와 한계(10분) / 황인철 9월 기후정의행동 조직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녹색연합)
- 패널 토론 : 오리(전쟁없는세상), 김윤영(빈곤사회연대),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김기범(경향신문 기자)
- 청중/종합 토론(30분)

2부(15:30 - 17:00) 9·24 이후의 기후운동 방향의 제안(라운드 테이블)

- 사회 : 한재각 9월 기후정의행동 조직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기후정의동맹)
- 패널 발표(각 5분) : 박이현(문화연대), 이영주(전국결집), 정록(인권운동사랑방), 권우현(환경운동연합), 김지은(전북비상행동), 정진영(경남비상행동), 서린(노동당/진보정당들 논의 종합), 김석(민주노총), 배여진(기후솔루션) [무순]
- 청중/종합 토론(30분)
- 패널 공통질문
 - 지역/시민/노동현장 조직화 전략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 연대체 운동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 거버넌스 전략/태도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 기후정의 및 체제전환의 상은 무엇인가?
 - 내후년 총선까지의 기후운동/정치의 전략은 무엇인가?

3부(17:00 - 18:00) 9·24 이후, 조직위의 향후 방향에 대한 토론(조직위 비공개 간담회)

1부 발표문

9월 기후정의행동의 성과와 한계

황인철 (9월 기후정의행동 공동집행위원장)

1. 개요

9월 24일, 서울 시청과 남대문으로 이어지는 도로에서 집회를 시작하여, 광화문, 종각, 남대문 등을 거쳐 이루어진 기후정의행진에 대규모 인원이(3만 5천명: 주최측 추산) 참여하면서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행진은 ‘기후재난, 이대로 살 수 없다’는 슬로건 아래에, ‘화석연료와 생명파괴 체제를 종식시키자’, ‘모든 불평등을 끝장내자’,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더 커져야 한다’는 ‘우리의 요구’를 내걸었다.

9월 24일의 행진 이외에도 19일부터 23일까지 ‘기후정의주간’로 정하고, 참여단체들은 ‘기후악당기업 규탄! 921강남행진’, ‘923 글로벌 기후파업’ 등의 수십 개의 행동을 펼쳤다. 또한 행진 당일에도 ‘사전부스’와 ‘오픈마이크’ 등에도 많은 단체와 시민들이 참여하여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번 행동을 위해서 9월 기후정의행동(924기후정의행진과 기후정의주간)을 조직위원회를 결성하였으며, 이에는 400여 개 단체들이 참여했다. 또한 행동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1억 8천만원 이상을 모을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2,500여 명의 추진위원이 모집되었다.

2. 참가자 설문 주요 내용

1) 조직위 참여단체 평가설문 결과

집행위는 조직위 참여단체의 평가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서 9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총 52개 단체가 응답을 하였다.

조직위원회의 목표한 바가 대체로 달성되었다는 평이고, 시민들에게도 호소력있게 전달되었다는 평이다. 이번 행동의 주요 성과로는 ‘다양한 사회운동의 폭넓은 연대와 결집’이 전체 응답의 53.8%(28)로 가장 높았고 ‘대규모 인원의 참가’가 48.1%(25), ‘시민사회 및 공론장 영역에서 기후의제가 주요의제로 부상’이 34.6%(18)로 뒤를 이었다.

향후에도 이번과 같은 행진의 조직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00%가 동의했으며, 활동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압도적으로 행진(88.5%, 46)이었고, 본집회(36.5%, 19), 사전행사(17.3%, 9)가 뒤를 이었다.

2) 참가자 평가설문 결과

집행위는 행진 참가자들이 누구이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행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조사는 (1)행진이 진행된 당일(9/24) 현장에서 진행된 조사와 (2)행진 다음 날부터 6일간(9/25-9/30)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된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설문 참여 총인원은 1015명으로, 현장 설문 참가는 192명, 온라인 설문 참가는 823명이었다

단체 회원으로 참여했다는 응답이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현장 설문에서 개인(혼자, 지인과 함께)으로 참여했다는 응답율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것을 더 주목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단체를 통해 알게된 경우가 많았지만(과반 이상) SNS를 통해 정보를 접한 경우도 많았다. 언론을 통해서 이 행진을 알게 되었다는 응답은 단체나 SNS 경로보다 낮았고, 심지어 지하철 포스터 등의 경로보다도 낮았다.

응답자들의 상당수가 행진에 참여하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인식 향상’과 ‘정부 및 기업의 반기후 태도의 변화’를 기대하였다. 또한 ‘기후정의를 위한 사회적 세력 형성의 기여’과 ‘불평등한 사회경제적 체제 전환 필요성 부각’에 대한 기대도 높았다.

온라인 설문에만 포함된 질문으로, 기후위기 해결과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가장 많이 꼽은 항목은 ‘자본주의 성장 체제 전환’이었다. 이어서 ‘기후정의를 실현할 정치세력화’와 ‘기후위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부 구성’을 많이 꼽았다. 또한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 중심의 정의로운 전환 추진’도 강조되었다.

행진의 여러 행사와 장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들의 대부분은 행진 자체를 꼽는 경우가 많았다. 그외에 온라인 설문 응답자들은 ‘광화문 도로 위의 다이인 퍼포먼스’와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의 발언(오후 3시 집회)’을 꼽는 경우가 많았다.

3. 종합평가 - 성과와 한계

조직위는 이번 행동을 준비하면서 아래와 같은 '기조와 목적'을 결정한 바 있다.

- 이 행진은 정부와 기업의 녹색성장과 탄소중립 정책이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돈벌이 시장을 창출하는 것에 불과한 상황에 맞서, 기후정의를 기치로 기후위기를 초래한 현 체제에 맞서고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세계를 만들기 위한 싸움이다.
- 이 행진은 기후위기의 해결을 요구하고 기후정의 실현을 염원하며 행동하기를 원하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연대하고 안전하게 참여하며 창의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대중적 평화 집회를 비롯한 다양한 불복종 직접행동을 지향한다.
- 이 행진은 기후위기를 우려하는 수많은 '기후시민'들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참여하여, 만연한 기후부정의를 바로잡고 긴급한 기후행동을 촉구하기 위한 사회적 힘을 결집하여 정부와 기업을 압박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 2019년 전국 7천-1만명 정도 참여했던 경험과 가속화되는 기후위기의 심각성, 기후위기의 대중 인식 확대, 기후정의운동의 성장 등을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2019년을 넘어서는 대규모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행진이 위에서 제시한 '기조와 목적'에 부합하고 달성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다음의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우리는 충분히 넓어지고 깊어졌는가?', '우리는 충분히 앞으로 나갔는가', '우리는 충분히 효과적이었는가?'

1) 우리는 충분히 넓어지고 깊어졌는가? (운동주체의 조직과 역량 측면)

9월기후정의행진 참가자는 2019년을 넘어섰고, 최소 2만명 이상을 모으겠다는 조직위원회의 목표는 충분히 달성하였다. 또한 집회 참석자들도 연령, 성별, 지역 등의 확인가능한 주요 지표에서 매우 다양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정치적 주체로서 발언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또한 집회, 행진, 문화제도 참여자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참여하면서도 충분히 고무될 수 있도록 기획되고 진행되었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많다.

행진 참여자의 수와 다양성과 함께 주목해야 할 것은 조직위원회에 참여하는 단체들의 수와 다양성, 그리고 집회, 행진, 오픈마이크 등에서 발언한 이들의 다양성일 것이다. 이들의 존재와 목소리를 통해서 기후위기가 더 이상 환경단체만의 의제가 아니며, 기후정의가 거의 모든 사회운동에 관여해야 할 의제가 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주었다. 다시 말해서 9월행동의

준비과정과 진행과정에서 다양한 운동주체들의 연대가 발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곧 기후정의운동의 외연을 크게 넓히는데 이번 기후정의행진은 크게 기여했다.

또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성과는 운동 주체를 만들어내고 공동의 경험을 쌓은 것이다. 많은 단체, 활동가, 시민들이 행진 당일에 그냥 모인 것이 아니다. 많은 이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홍보 활동이 있었고, 교육/강의, 간담회, 오픈마이크 등의 사전 행동들이 이루어졌다. 또한 행진 당일에 수많은 연설을 함께 들었으며, 함께 구호, 노래, 춤, 다이인 시위를 함께 하는 경험을 공유했다. 이번 행동은 무기력을 벗어나 희망의 실마리를 찾는 계기가 되었다. 기후정의운동을 위한 다양한 주체를 찾고 서로 연결할 기회를 추구했고 일부나마 성공했다. 이는 조직위 참여 단체들의 설문조사에서 '다양한 사회운동의 폭넓은 연대와 결집'이 가장 중요한 성과로 뽑혔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3항을 참고할 것)

기후정의운동이 몇몇 소수 활동가와 전문가들의 운동을 넘어서 대중운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행진을 준비하는 연대의 경계를 무원칙적으로 넓힌다는 뜻은 아니었다. 2019년 9월과는 다르게 '기업과 기업 관련 단체'의 조직위 참여를 배제하기로 했다. 또한 정당 참여를 '기후위기비상행동' 참여 정당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국민의힘과 민주당과 같은 보수정당들의 참여를 배제했다. 또한 기후정의 원칙에 따르고 있지 않은 성폭력 피해를 야기하는 단체의 참여도 배제하였다. 이를 통해 기후정의 운동이 지향하는 바를 명확히 보여주고자 했다.

2) 우리는 충분히 앞으로 나갔는가? (운동방향과 메시지 측면)

기후위기의 비상상황에 대한 인정이 우선과제였던 2019년과 달리, 지난 3년간의 운동 내외부 환경의 변화는 좀 더 진전된 운동의 목표와 방향설정을 필요로 했다. 기후위기의 책임과 원인을 명확히하고, 위기의 불평등을 드러내며, 녹색성장과 같은 잘못된 해법에 맞서는 것 등이 그것이다. 그에 따라 이번 '9월기후정의행동'은 그 명칭에서 나타나듯, '기후정의'를 전면에 내세우고, 불평등한 자본주의를 기후위기의 근본원인으로 지목하고, '체제전환'의 필요성을 그 방향으로 강조하였다. 또한 단순히 온실가스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존엄한 삶'을 주요한 목표로 강조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9·24기후정의행진은 보다 급진적인 성격을 보여주었고, 이것은 참여단위들의 기후위기의 절박성, 근본적 원인을 다루어야 할 필요성, 그리고 정치사회적으로 급진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급진적인 슬로건과 요구사항이 기존에 참여하지 않았던, 많은 단체와 사람들을 참여시키는데 기여한 측면도 있다. 아울러 동시에 조직위 안에서 다양한 경향이 혼재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기후정의'라는 구호에는 폭넓은

동의가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양하고 상충되는 이해가 존재한다. '체제전환' '자본주의 반대'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도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가 그러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런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이번 9·24기후정의행진의 운동의 방향은 현 시점에서 필요하고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모든 단위가 동의하는 수준으로 요구수준을 낮추거나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필요한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소통하는 과정 자체가 운동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기후정의' '체제전환'과 같은 용어의 급진성이 바로 실제 급진적인 변화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기후정의와 체제전환이라는 큰 방향 설정은 위기가 어디에서 비롯됐으며 어떻게 풀어야하는지에 대한 구조적 인식을 분명히 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반면 추상적인 슬로건에 머물렀기에 기후위기의 책임당사자들에게 효과적인 압력으로 작용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기후정의', '체제전환'이라는 용어가 담론을 넘어 사람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와 닿도록 하는 현실의 체제에 구체적인 균열과 변화를 만드는 구체적인 요구안까지 만들어낼수 있을때, 위기를 낳은 책임자들에게 압력으로 작동될 것이다.

3) 우리는 충분히 효과적이었는가? (정치사회적 변화 측면)

기후위기를 우려하고 기후정의 실현을 요구하는 시민들을 광범위하게 모으고 그 목소리를 사회적으로 부각시키며, '기후부정의'와 '기후불평등'에 대한 담론을 확산한다는 대내적인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했다. (주로 진보개혁적인 성향에 국한되는기는 했지만) 언론들의 보도들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하나의 증거가 될 것이다.

9·24 직후 일주일간 진행된 탈석탄법 제정이 단시간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도 연대의 힘에 대한 자신감으로부터 나온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번 행진이 기후위기의 책임이 큰 기업과 정부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만큼 위협적이었는가라고 질문한다면 부정적이다. 이번 행진의 목표가 2019년의 대중 행진을 되살리고 기후정의운동을 가시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면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 몇가지로 수렴되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추상적인 요구사항은 위협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이를 내세운 행진의 '톤과 매너'도 다양한 주장 속에서 명확한 타겟의 설정이 어렵게 된다.

'우리의 요구'는 왜 추상적일 수밖에 없었나? 너무 많고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그들의 요구를 단순히 취합하여 나열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방대한 일이 되고, 요구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대중성 확보를 목표로 했기에 구체적이고 뾰족한 요구안을 만들려고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의 요구'가 비록

추상적일지라도 애초 목표와 취지에 부합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후정의행진의 지향을 밝히는 것에 초점을 맞춘, 추상성 높은 요구로 대신한 측면도 있었다. 다수의 다양한 단위들이 참여를 통해 사회적 압력을 높이는 것과, 그 힘이 뾰족한 요구로 수렴되게 하는 것, 이 둘을 동시에 충족하는 것의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둘지에 대한 점이 이후의 과제로 남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관련하여 다음 행진에서는 구체적인 요구를 만드는 적극적인 시도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4. 마치며

9·24 기후정의행진 직후 일주일 뒤 탈석탄법 5만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되었다. 9·24 당시 1만5천명에 불과하던 청원 숫자가, 단 5일만에 3만5천을 채웠다. 기후정의행진 당시 삼척 지역주민의 호소를 직접 들은 이들이 행동에 나섰고, 조직위에 함께 한 단위들이 회원들에게 참여문자와 이메일을 보냈고, 이를 본 사람들이 SNS와 카톡방에 퍼 날랐기 때문이다. 9월24일, 함께 했던 경험이 새로운 행동을 위한 자신감과 동력을 작용했을 것이다.

2019년에도 9월 기후위기비상행동에 참여했던 이들의 변화를 종종 목격하곤 한다. 집회라고는 난생 처음 왔던 이들이 기후활동가로 변신하고, 친구들과 함께 기후위기 책을 읽고 모임을 하고 단체에 가입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이렇듯, 2022년 9월24일 거리에서의 경험은 이후 ‘원체험’과 ‘원기억’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한번의 행사 후 참가자들이 모래알처럼 다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기억과 체험이 연대의 고리와 사실이 되어 더 큰 우리와 더 앞선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다.

벽에 구멍을 내는 압핀은, 힘을 가하는 머리판이 넓을수록, 그리고 벽에 꽂힌 핀이 뾰족할수록 더 효과적이다. 9·24에서 경험한 우리의 힘이 체제에 균열을 내는 압핀이 되도록 우리의 행동을 더 넓게 그리고 더 뾰족하게 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9·24에 다녀온 후 실린 한 언론의 칼럼의 일부를 인용하며 마무리한다.

3만5천명이 도심에 모였다고 당장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진 않을 것이다. 이날의 사건은 현 정부의 ‘외교 참사’를 둘러싼 정치인들의 공방에, 고물가·고달파·고금리 등 경제위기를 알리는 경고음에 이미 묻혀가고 있다. 집회 참가자들이 하나로 뜰뜰 뭉치기보다 서로 반목하는 일도 많을 것이다. 공정, 성폭력, 차별금지법, 임신중단권, 동물권 등 최근 뜨거웠던 이슈들에 이들의 의견이 모두 일치했을 리 없다. 위선의 협의에서 자유로운 사람도 드물 것이다. 기후정의를 외친다고 재건축에 대한 기대, 육식 선호, 지방에 쌓여가는 기후파괴시설에 대한 무관심이 금세 사라질 리 없다. 하지만 나는 9월24일 광장에 모였던 다수가 ‘너나 잘하세요’라는 비아냥에 ‘잘 못하지만 한번 해보겠다’며 걸음을 떼는 사람들, 자신의 취약함을 인간 본성으로 돌리는 대신 비판과 성찰을 거듭하며 기후정의를 위해 일보 전진을 감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취약한 생명들한테 광장의 의미는 크다. 정치적 사안이 터질 때마다 날카로운 언어로 상대를 응징하는 데서 쾌감을 얻는 소셜미디어 속 마주침과 달리, 광장에서의 마주침은 상대의 표정에서 위로받고, 보잘것없는 개체가 서로 연결되고 차이를 조율해가면서 공동의 힘을 키운다. 9·24 기후정의행진의 선언처럼, 이렇게 관계성의 정치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길이고 우리가 대안이다.’

– 조문영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취약한 생명들의 일보전진> 중

1부 토론문

토론 1. 오리(전쟁없는세상)

924기후정의행진을 조직하고 실행하고 마무리하고 평가하시느라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전쟁없는세상은 비록 조직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8월 말에야 참여를 하였고 그 이후에도 조직위원회 소속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전혀 참여를 하지 않았기/못했기 때문에 발표 내용처럼 자세히 평가를 할 수도, 할 위치에도 있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활동의 결과나 성과를 왜곡할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리를 제안 받았을 때 승낙을 한 것은 전쟁없는세상이 왜 924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참여하면서 간략한 감상(?),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지, 기후운동의 선배들로부터 어떤 배움을 얻고 싶은지 얘기해보고 싶어서입니다.

전쟁없는세상은 단체명에서 바로 알 수 있는 것처럼 반전운동단체입니다. 저희는 전쟁이 어떤 미치광이 군 최고 수뇌부의 즉흥적인 결정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군사화된 일상이 폭력적으로 발현한 결과라고 여깁니다. 군사화된 일상이라면 여러 가지 제도나 기관, 문화까지 포괄할 수 있지만 저희는 내부적인 합의를 거쳐 그 중에서도 딱 2가지 징병제도와 무기거래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자를 위해 지난 20여년간 병역거부자들을 지원해왔고 최근에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후자를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훌수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동아시아 최대의 무기박람회 아덱스 저항행동을 지속해오고 있고 최루탄이나 물대포와 같은 한국산 경찰무기, 확산탄 등의 개별무기, 혹은 예맨전쟁과 같은 특정 전쟁에 한국산 무기가 수출되는 것을 감시하고 막는 활동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현대의 전쟁이 기후위기를 낳는 석유 등의 화석연료, 식량, 식수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기도하고 또 전쟁없는세상이 전쟁의 원인이 되는 일상의 군사화를 문제 삼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활동은 저희에게는 평화운동이기도 합니다. 일상의 군사화를 상징하는 군대, 방위산업체, 군사기지 등 각종 군사기구들은 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 합니다. 이들 기구들의 활동 및 존재 자체가 심각한 환경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체로 무시됩니다. 감축의무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뿐 아니라 무기 원료 추출부터 수질과 토지의 오염까지 군사기구와 그 활동으로 인한 피해는 그 규모가 크고 다양합니다. 비록 기후위기 문제를 단체 활동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삼고 있지는 않았지만 저희는 그 동안 무기거래감시캠페인과 단체의 주요 프로그램은 아니나 연대운동인 세계군축행동의날 캠페인을 통해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924기후정의행진에 함께 한 것도 그 주간에 마침 DX Korea라는 지상군 무기전시회가 일주일간 킨텍스에서 개최되었고 군사부분, 특히 무기거래 문제를 기후위기와 연결해보고 싶어서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사회운동에서 가장 확실한 승리전략인 쪽수 전략에 동참하기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마침 행진코스가 바로 앞은 아니지만 한화빌딩 근처를 지나간다고 해서 몇 차례 기획회의를 통해 ‘한화, 본캐는 전쟁장사 부캐는 기후악당’이라는 대형 애드벌룬 현수막을 띄우는 전술을 합의했습니다. 한화는 한국에서 제일 규모가 큰 방위산업체로 K-9 자주포, 바라쿠다 장갑차, 천궁-Ⅱ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등 다양한 무기체계를 생산, 수출합니다. K-9 자주포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폴란드에, 바라쿠다 장갑차는 웨스트파루아 사람들의 독립운동을 무력진압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천궁-Ⅱ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은 예멘 내전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액션을 통해 한화가 전세계 분쟁/전쟁을 통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지, 기후위기에 얼마나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와 종로경찰서의 깽판 때문이긴 했지만 거의 막판까지 행진코스가 확정되지 않아서 사실 전술을 세우는데 조금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비슷한 행진을 하게 되면 좀 고려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처럼 행진코스를 활용한 전술을 세우는 단위가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전쟁없는세상은 내년 20주년을 맞습니다. 20년 간의 노력으로 저희가 처음 시작한 캠페인이자 가장 공을 들여왔던 캠페인인 대체복무제 도입 캠페인이 아쉬운 대로 일정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 같아서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군에 입대하는 대신 대체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고 기간도 길지만 혹시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잠시 쌌지만 요는 저희가 주요 캠페인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1년간 전없세의 다음 10년을 기획하는 비전워크숍을 여러 차례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앞으로 기후위기와 군사주의에 관한 활동을 전없세의 메인 캠페인 중 하나로 삼기로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잘 모르는 분야라 세미나도 필요하고 캠페인의 구체적인 목표치와 대상을 정하는 워크숍들도 시리즈로 진행해야 하지만 새로운 캠페인을 시작하는 지금 전없세 구성원들 모두가 조금 흥분되고 기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내년 5월 20주년 행사를 마치고 나면 말씀드린 세미나와 전략워크숍들을 차차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과정에서 기후운동의 선배님들을 초청해서 얘기도 듣고 조언도 듣는 시간도 같게 될 것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 막 기후운동의 꽁무니를 쫓아가려고 하는 새내기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기후운동의 비전과 중장기, 단기 계획이 보다 명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저희처럼 다른 분야에서 (느지막이) 함께하려는 단위들이 따로 놀지 않고 전체 기후운동의 비전에 맞춰 똑똑하게 계획을 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후정의나 체재전환은 너무나 옳은 말이고 만프로 동의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달성 가능한 캠페인 계획들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저희의 활동의 경험으로는 목표가 너무 추상적이거나 측정 불가능하거나 현재 우리가 가진 자원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사람들은 성공의 얻기효능감을 가 어려워 금방 지치고 어차피 안될 것이라는 불안감에 빠지기 쉬운 것 같습니다. 924행진은 전체 기후운동의 하나의 전술이었기 때문에 924행진만으로 어떤 변화를 당장 끌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슬로건의 급진화와 이러한 문제의식의 확산이라는 애초 의도했던 목표에 도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에 동의하며 다만 슬로건의 급진화와 대중적 확산이 기후운동의 최종 비전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왜 필요한지, 이것을 달성한 이후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지와 같은 전략적 논의가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리며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가르쳐주세요. 감사합니다.

토론 2. 김윤영(빈곤사회연대)

반빈곤운동의 9·24 참여 배경과 문제의식

빈곤사회연대는 노점, 철거, 장애, 흄리스, 노동조합 등 다양한 단체들의 연대체다. 경쟁과 차별을 심화하는 신자유주의가 빈곤 문제를 심화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반빈곤 연대운동’을 지향하며 2004년 결성되었다.

빈곤사회연대는 빈곤층 생존권 쟁취, 강제철거 반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빈곤층 복지제도 개선·확대를 중심으로 활동해왔기 때문에 환경, 기후정의 운동과는 다소 마음과 실천의 거리가 있었다. 가장 가까운 활동이라면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겨울마다 발생하는 에너지 빈곤층의 참사에 대응하는 활동들이었을 것이다. 기후위기에 관한 관심과 실천을 확대할 수 있었던 계기는 2019년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참여하며 921행동 참여자를 조직하는 것이었다. 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드러나는 기후위기의 현상은 남반구, 빈곤층의 생존에 가장 먼저 타격을 입히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확대하기 위해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은 참가단체들을 대상으로 기후위기에 관한 강의를 2020년 초 주요 사업으로 진행하며 2020년 3월 행진을 준비했다.

이후 경험한 코로나19와 혹한, 폭염, 가뭄과 장마와 같은 재난 상황은 반빈곤운동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참여하는 일이 얼마나 시급한지 알려주었다. 더불어 주거권, 생존권 확보와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대와 같은 기존 반빈곤운동의 요구가 기후위기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최소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체감할 수 있었다.

빈곤사회연대는 924 기후정의 행진, 주거권대행진¹, 빈곤철폐의 날² 행진을 ‘세상을 바꾸는 3대 행진’으로 삼고, 참여를 조직했다. 기후정의행진을 준비하는 중에 8월 반지하 수해참사가 일어났다. 참사 다음 주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불평등이 재난이다〉 폭우참사로 희생된 주거취약계층·발달장애인·빈곤층·노동자 추모행동’(약: 재난불평등추모행동)를 꾸려 활동했다. 기후위기 속 주거권, 생존권에 관한 요구는 다소 추상적이거나 많은 설명을 거쳐야 연결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반지하 수해 참사 이후 주거권과 노동자 장애인 빈곤층의 생존권이 기후위기와 얼마나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지에 관해 설명할 필요가 줄었다.

¹ 매년 10월 첫 번째 월요일은 세계 주거의 날이다. 주거의 날을 앞둔 10월 1일 토요일, 한국 주거운동 단체들은 주거권대행진을 열었다.

² 매년 10월 17일은 세계빈곤퇴치의 날이다. 빈곤사회연대는 이날을 ‘빈곤철폐의 날’로 명명하고, 빈곤이 우리 사회의 구조적 결과임을 밝히고 가난한 이들의 싸움에 연대할 것을 호소하는 행진을 연다.

평가와 이후 과제

집회 및 행진 평가

924행진에 주로 참여한 반빈곤운동 단체들은 홈리스행동, 쪽방 주민 등 ‘기후취약계층’, ‘주거취약계층’으로 불리는 이들이었다. 2019년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도 우리는 ‘에너지 바우처가 아닌 주거권을’, ‘모두에게 평등한 온도를’과 같은 주거권과 관련된 피켓을 들었지만, 2019년에 비해 2022년 행진에서 기후위기 속 긴급한 주거권 보장의 요구는 겉돌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집중력이 매우 높은 집회였다. 유인물을 나누어주느라 집회 중간에 곳곳을 다녔는데, 핸드폰을 보는 이들은 적고 무대의 발언에 대한 집중도는 무척 높았다. 대표자 발언 일색이 아닌 다양한 당사자의 목소리를 배치해서 발언들이 흥미롭고 배울 점이 많았다. 행진의 경우 도로로 진출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활력이 떨어지는 면이 있었다.

중앙무대의 장악력은 참여자들에게 둉등한 경험을 선사한다는 점에서 편리하지만 참여자를 수동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 사전집회, 집회 시작 전 오픈마이크, 행진 차량 발언대 등 다양한 기획을 더 돋보이게 알리면 좋았을 것 같다. 행진의 경우 행진 진행자는 참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흥겨운 노래가 신이 나긴 하지만, 참여자들 스스로 구호를 외치는 것 역시 중요한 행동이라는 점이 준비 과정에서 강조되면 좋겠다.

기조

이번 기후정의 행진의 ‘체제전환’, ‘이대로 살 수 없다’는 구호는 빈곤과 불평등을 양산하는 세계와 기후위기를 만드는 세계의 뿌리가 같은 것이라는 반빈곤운동의 인식과 동일한 것이었다. 때문에 빈곤과 불평등에 맞서는 운동이 기후정의 운동에 함께 해야한다는 당위에 힘을 실어줬다. 처음에는 ‘체제전환’은 다소 난해한 구호가 아닌가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세계가 운영된 방식이 현재 우리가 겪는 곤란함의 원인이라는 것을 말할 때 ‘체제전환’을 우회해서 설명하려면 더 복잡해지곤 했다. 체제전환은 기존 사회운동의 구체적인 요구와 기후정의 운동이 하나의 큰 흐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구슬을 끼는) 실이었던 셈이다.

기타

평가서에는 ‘이번 행진이 기후위기의 책임이 큰 기업과 정부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만큼 위협적이었는가’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모인 힘에 비해 예각화 된 구호가 없어

당장의 변화를 촉구할 만큼 날카롭지 않았다는 점에 공감하지만, 긍정적인 평가도 덧붙여 남기고 싶다. 집회와 행진을 여는 것은 명확한 요구를 통해 이행을 촉구한다는 목표를 갖지만,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우리 스스로의 힘을 믿기 위한 실천의 과정이기도 하다. 이번 기후정의행진을 통해 얻은 것은 기후위기에 관한 공포나 무력감을 넘기 위한 용기가 아닐까 싶다.

행진 이후

여전히 각 단체들의 현장 회원들과 대화를 나누어보면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개인적 실천 이상을 상상하는 것을 곤란해한다는 것을 느끼곤 한다. 그러나 이 위기가 무척 구조적이라는 점만은 모두 공감하고 있다. 빈곤사회연대는 기후정의행진 이후 후속 사업으로 1017 빈곤철폐의 날을 맞아 <불평등한 기후재난의 시대, 싸우는 사람들의 안부를 묻다>라는 기획 연재³를 진행했다. 장애인, 흄리스, 쪽방주민, 철거민, 노점상이 경험하는 각각의 기후위기에 관한 경험과 생각을 모으는 작업이었다. 기후위기의 피해자로만 호명되는 이름이 기후위기에 맞선 변화의 당사자로 어떻게 이동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끊임없이 시도하는 것이 이제 반빈곤 운동의 향후 과제다.

마치며

지난 2022년 1017 빈곤철폐의 날을 맞아 '우리가 바꾼다'라는 노래를 만들었다. 2절의 가사 한 소절로 토론문을 마친다. "돈만 아는 사람들이 지구를 불태운다. 좀 더 나은 내일을 우리가 만들자. 용기를 모으면 힘이 솟는다. 힘같이 모으면 세상이 바뀐다!"

³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List.html?sc_sub_section_code=S2N69&view_type=sm

토론 3.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이어말하기의 포문을 열어야 할 때

924기후정의행진한 당일과 다음날 아니 며칠은 행진에 참가한 사람들의 감회가 여러 sns에 넘쳐났다. 3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참가규모에 대한 감흥만이 아니라 행진에서 느꼈던 참가자들이 기후정의행진에서 외쳤던 구호와 행진의 자유로움과 평화로움, 다양성을 몸으로 느끼며 나눈 감동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때의 감동을 이어가고픈 열망으로 평가의 말을 남긴다.

또한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의 집행위는 아니었으나 여러 워크숍과 기자회견, 전체회의 등에 꾸준히 참여한 단체로서, 즉 기후정의행진을 조직하는 집행단위에 있지는 않았으나 단순참가자는 아닌, 중심도 주변도 아닌 곳에서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한 사람으로서의 평가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봄바람행진단과 함께 921강남행진을 했고, 벽보붙이기와 오프마이크와 행진 참여를 했다. 또한 기후정의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환경단체가 아닌 이제 기후위기에 발을 뗀지 얼마 되지 않은 인권단체의 시선이기도 하다. 이러한 필자의 위치성에 따른 평가는 이후 펼쳐질 기후정의운동의 한계이자 가능성을 담는 것이 될 수 있으리라는 바람으로 평가를 남긴다.

1. 무엇을 남겼나

3만 5천명의 의미

924기후정의행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다. 주최 측 추산 3만 5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결합할 수 있었던 것은 폭우와 태풍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후재난을 몸으로 체감할 수밖에 없는 정세가 낳은 것이기도 하다. 그만큼 기후재난의 심각성에 대한 동의와 이제는 더 이상 그대로 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는 인식을 행진 참여라는 실천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전국에서 모인 자리에 함께 하지는 않았지만, 서울행진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지역에서 개최한 기후정의 집회에 참여한 사람까지 센다면 그 규모는 더 클 것이다.

이는 행진에 매우 다양한 사람들, 여러 의제로 운동해온 활동가들이나 주민, 당사자들이 참여했기에 가능한 것이기도 했다. (다양한 사회운동의 폭넓은 연대와 결집) 농민, 홈리스, 장애인, 노동자, 학생 등 기후위기 주체들의 참여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기후위기의 다양한 당사자들이

가시화됐다는 의미이자 기후위기의 결과이자 방향으로서 기후정의에 대한 필요성 또는 요구가 드러났다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열린 행진이 주는 자유로움과 경계 없음

당일 행진은 자유롭고 많은 사람들이 참가해 단체로 조직된 사람들이 아니어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 삼삼오오 가족이나 친지 때로는 혼자 와도 어색하지 않은 분위기는 집회참여자들을 나누는 경계가 느껴지지 않았다. 행진에서 흘러나오는 구호나 연설, 음악 등은 사람들을 합류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 각자가 만들어온 피켓이나 구호의 다양함은 누구든 들어올 수 있는 열린 행진으로 만들었다. 경계 없는 분위기의 행진은 중간에 누구든 끼어들 수 있음, 합류의 가능성을 열어 대오를 넓고 풍부하게 만든다. 물론 기후위기는 모두가 겪을 수밖에 없는 의제라는 점을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위기 최일선 당사자들의 목소리, 인권의 목소리

집회나 행진에서 눈에 띄었던 것은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의 발언이다. 기후위기의 재난을 온몸으로 겪고 있는 농민, 발전소주변의 주민, 장애인, 빈민,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정의롭지 못한 대책으로 생존의 위기에 몰린 비정규 노동자들의 발언이다. 폭우로 삶터를 잃어야 했던 빈민들과 농민, 위기의 상황에서도 탈출구조차 없는 현실을 들으며 기후위기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재난의 불평등한 현실을 엿볼 수 있었다. 엄청난 피해를 봄에도 기후위기를 부추기는 정책을 결정할 때도 의사결정권이 없는 사람들, 제약된 사람들이다. 이것은 왜 기후정의가 필요한지를 상기시켜주었다. “기후정의는 그 당사자들이 권력을 갖는 것이다. 우리가 길이고, 우리가 대안이 될 것”이라는 924기후정의행진 선언문에 나온 내용이기도 하다.

소수자인권운동을 주로 하는 인권단체로서 만나는 사회적 소수자들을 다시 기후정의행진에서 만난다는 것 자체로 기후위기가 인권의 문제임을 상기시켜주는 것이었다. 기후위기가 인권의 문제라는 것은 생명권과 건강권의 문제이자 노동권의 문제이며, 주거권의 문제이며 식량권의 문제이다. 나아가 차별에 맞선 평등의 의제이다.

체제전환(반자본주의)이라는 구호의 급진성과 요구의 추상성

‘기후재난, 이대로 살 수 없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924 기후정의선언문’을 통해 요구사항을 정리했다. “기후위기를 야기한 주요 선진국과 대기업들이 기후위기를 또 하나의 이윤 창출·부의 축적 기회로 삼으며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우리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는 방향을 선언문에 담았다. “화석연료와 생명파괴체제를 종식해야 한다, 모든 불평등을 끝내야 한다,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의 목소리는 더 커져야한다”는 요구사항은 워크숍과 전체회의, 집행위원회를 통한 결과였다.

행진 구호에서 기후위기와 불평등 원인으로서의 자본주의 성장체제를 문제 삼고 따라서 위기 탈출을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제를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끝없는 이윤창출과 성장만을 위해 달려온 자본주의체제이기에 기후위기를 낳았고, 따라서 기후위기에 맞선 운동이 계급투쟁, 자본가계급을 향한 투쟁이 될 수밖에 없다. 체제전환과 반자본주의라는 큰 방향 설정은 위기가 어디에서 비롯됐으며 어떻게 풀어야하는지에 대한 사회구조(기후위기의 체제)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천명했다는 의미가 있다. 간명하고 분명한 방향성은 모두의 지향을 추상적이나마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물론 이 구호에 대해 동의하기 어려운 참가자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공식적인 반대가 없다는 것은 동의를 확보해가는 과정이자 균열 직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한계와 과제

추상적인 위기의 책임(자)에 대한 요구

그러나 평가에서도 나왔듯이 ‘기후정의’나 ‘체제전환’과 같은 용어의 급진성이 바로 실제 급진적인 변화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추상적인 요구안으로 머물렀기에 기후위기의 책임당사자들에게 효과적인 압력으로 작용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대기업, 정부, 거대양당 등의 책임자들에 대한 요구와 방향이 덜 드러났다. 즉 ‘체제전환’이라는 용어가 담론을 넘어 사람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와 닿도록 하는 현실의 체제에 균열과 변화를 만드는 구체적인 요구안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 때 위기를 낳은 책임자들에게 압력으로 작동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일까. 아쉬웠던 것 중 하나는 우리의 구호나 요구가 세계체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책임을 분명히 하지는 못했다는 점이다. 위기가 일국적 차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임을 선언문에

명시하였음에도, 학술적으로 남반구와 북반구의 문제임을 꾸준히 함에도 924기후정의행진에는 이 부분이 보이지 않았다. 세계경제대국, 경제10위권의 나라이 한국의 책임을 분명히 하여 생태계 착취와 파괴에서의 책임이 매우 큰 현실을 덜 드러냈다. 한국기업들의 성장과 개발이 전 세계 생태계와 타국 인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지는 못했다. 이 또한 요구의 추상성 때문일 것이다.

다행히 이를 보완했던 것은 921강남행진이었다. 기후위기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대기업들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강남행진이 924행진에서도 드러날 수 있도록 행진을 배치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교차하는 목소리에 근본적으로 다가가기

다양한 기후위기 일선의 당사자가 발언을 했으나 아직 기후위기를 낳는 여러 체제의 문제, 차별의 문제가 온전히 드러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제 발을 뗐으니 좀 더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기후정의행진에서 최일선의 당사자들의 발언은 '기후위기는 모두의 문제'라는 말이 가진 위기의 보편성을 드러내는 유효성에도 불구하고 차이와 위험의 현실간극을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를 뛰어넘는 사유를 가능하게 했다. '우리 모두의 위기'에서 '우리 중 누가 더 위험에 처하는가'라는 '위기의 간극'을 인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네가 위기에 처하면 나의 삶도 행복하지 않다', '차별과 착취에 반대한다'는 인식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 내의 간극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하기 위한 방안들도 많이 논의되고 실천되면 좋겠다. 기후위기와 빈곤·불평등의 뿌리는 같다는 말은 불평등을 놔둔 채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미기도 하다.

몇몇 발언에서 언급된 젠더불평등과 계급불평등, 종차별주의, 이분법적 (재)생산체제에 대해서는 좀 더 깊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기후위기는 다양한 억압체계에 여러 위치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위기의 교차성에 대해 사유해야 한다. 인권을 억압하는 체제가 다양하게 있듯이 기후위기의 영향도 그 체제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것조차 불평등할 수밖에 없다. 기후위기가 낳는 질병, 재난 상황에서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들 대부분이 여성이나 비정규직이라는 현실이 보여주듯, 기후위기는 진공상태에서 나타나지 않으며, 기후위기의 결과는 억압체제의 불평등한 작동 속에서 불평등한 결과를 낳는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코로나가 멈춘 세상에서 미세먼지가 온실가스가 줄어들었고, 기후위기가 만들어낸 온갖 바이러스는 동물의 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보여주는 인간 동물과 비인간동물의 서로 다른 위치성에 대한 사유는 중요하다. 기후위기의 결과를 심화시키는 체제, 즉 장애인, 성소수자 등 주류의 체제가 추구해온 속도와 이분법적 성장체제, 재생산구조가 누구의 삶을 억압해왔는지에 대해 깊이 사유하여야 한다. 그동안 사회체제가 생산과 재생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장애인, 성소수자들을 배제해왔는지와 연관되어 있다.

이렇듯 기후위기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체제, 종차별주의 체제에서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집단들에게 다르게 작동된다. 사회적 소수자들의 삶에 주목한다는 것은 우리의 성장중심 체제가 사실 어떠한 억압체제를 유지했기에 가능했는지 사유하는 것이다. 공존은 추상적인 ‘함께 살자’는 구호로 가능하지 않다. 기후위기가 인권의 문제고 불평등의 문제라는 말은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이, 사회적 소수자들이 겪는 차별의 문제를 같이 풀 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뜻이기도 하다. 인권운동은 ‘2008촛불인권선언’과 ‘2018년 폐미니즘으로 다시쓰는 인권선언’을 하며, 생명권의 문제나 환경권의 문제가 인간동물만의 문제를 넘어서야 함을 분명히 했다.

우리가 길이고 대안이라는 말은 기후위기를 멈추기 위해서는 모든 불평등체제, 성장 중심의체제, 인간중심주의, 가부장제를 멈추어야 가능하다는 말이기도 하다. 체제전환은 반자본주의만이 아니라 착취의 고리 중 하나인 가부장제, 계급착취의 자본주의체제, 이분법적 (재)생산체제의 착취사슬을 끊을 때 가능하다.

물론 반자본주의의 다양한 결이 있음을, 아직 우리가 바라는 다른 세상에 대한 상이 같지 않음을.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이어말하기를 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가부장제가 유지되는 체제전환, 종차별주의를 용인하는 체제전환을 대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인간만의 이기적 배제적 권리를 넘어 모두의 공존을 향한 실천을 사유하는 것으로 이어지면 좋겠다. 더 많은 이어말하기 속에서 우리의 인식의 확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또한 일회적인 기후정의행진에 머물지 않도록 함께 할 수 있는 일상의 노력들, 교차하는 기후정의의 실천들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무겁지 않게 다양한 영역에서의 일상적 실천들은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기후위기가 현재의 문제라면 일상의 실천이 이어져야 하는 문제다. 일상적인 삶과 구조(체제)와의 투쟁이 같이 가기를 기대해 본다.

토론 4. 김기범(경향신문)

언론 보도

경향신문(9월 24일)

〈3년 동안 더 깊어진 기후위기에 청소년들도 거리로…“더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참석 인원이 크게 늘어난 점 외에 3년 전 행진 때와 올해 기후정의행진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환경단체뿐 아니라 다양한 시민단체와 정당, 지역모임, 노동조합 등이 대거 참여한 점이다. 장애인단체, 기본소득을 요구하는 단체 등 열핏 기후위기와는 관계가 적어보이는 단체들도 다수 참석한 이날 행사의 참석자들은 시청광장 인근부터 숭례문까지 도로를 가득 메웠다.

3년 전에 비해 어린이·청소년 참가자들이 많이 참석한 것도 눈에 띠는 점이었다. 전북 무주의 대안학교인 푸른꿈고등학교의 경우 전교생 60여명 중 사정이 있는 10여명을 제외한 50여명의 학생들과 교사들이 이날 집회에 참석했다. 최양은 “학교에서 다같이 행진에 참석하면 좋은 경험이 되겠다고 뜻이 모아져서 참석하게 됐다”며 “청소년들은 지금 당장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별로 학교 단위나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단체로 참석하거나 부모와 함께 온 어린이·청소년들도 많았다. 서울 은평구에서 친구들과 함께 행진에 참석한 김진하군(15·가명)은 “뉴스를 통해서, 날씨를 통해서 매년 지구가 계속 더워지는 것을 실감하고 있고 지구가 아무도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가는 것 같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모여서 목소리를 내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기후정의행진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최군은 “이렇게 많은 이들이 뜻을 같이 한다는 것에 놀랐고, 이렇게 많은 이들이 모여서 기후정의를 주장하면 정부도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에서 기후정의를 위한 활동에 계속 참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기후위기에 대해 잘 몰랐는데 중학교에 들어와 환경 교육을 받으면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열린 기후정의행진 본집회에서는 ‘기후위기 최전선 당사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청소년과 청년 대표로 나선 청소년기후행동 소속의 김보림씨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사회 말고는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사회는 없다”면서 “기후위기는 불평등과 차별의 문제임을 우리 모두가 외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착취와 불평등을 강화해온 경제 시스템이 아닌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9월 27일)

[왜냐면] 이도흠 | 한양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지난 24일 서울시청 앞과 서울광장 일대에서 기후정의 집회와 행진이 있었다. 3만5천여명이 참여했다. 젊은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나이대 시민이 참여했고 가족 참여자들도 많이 눈에 띄었다. 의외로 반자본주의를 주장하는 발언과 구호가 자주 터져 나왔다. 그동안 좌파나 노동운동과는 거리를 두었던 한국 환경운동 흐름에 비춰보면 팔목할 만한 변화다.

몇 가지 질문

- 언론 홍보는 충분했는가?
- 미래세대의 목소리가 충분히 담겼는가? 미래세대가 직접 조직하고, 홍보하고, 참여까지 이어지도록 보장되었나?
- 기후위기를 더 오래 직접적으로 겪어야하는 어린이, 청소년들의 요구, 지향이 충분히 담겼는가?
- 슬로건이나 주제 의식이 좋았던 것에 비해 다같이 쉽게 외칠 수 있는 구호는?
- 이대로 살 수 없다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 구체적인 요구안은 무엇인가?

2부 패널 발표문

박이현 / 문화연대

1. 지역/시민/노동현장 조직화 전략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924 기후정의행동 조직위원회의 주요 전략은 기존에 조직화된 조직과의 연결이었다. 이는 조직위가 구성되고 행사까지 세 달여 동안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었다. 한편, 그간의 기후운동 상설연대체(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의 조직화 전략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듯 하다. 강좌를 개설하는 등 미조직 시민을 만나려는 노력을 하긴 하지만, 이를 통해 새로운 조직이 결성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 우리는 아직 '개인'들이 분담금 납부 혹은 캠페인 참여와 같은 수동적인 방법 이외에 능동적으로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제안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후운동이 기존 사회운동 세력을 끌어들이는 만큼 기후라는 이슈를 통해 만난 새로운 대중들을 조직하고 사회운동으로 결합시키려는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 예컨대 기후위기와 관련한 글쓰기 모임을 조직하고, 이들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사회운동 이슈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이런 점에서 내가 가장 눈여겨 보고 있는 그룹 혹은 모델은 멸종반란이다. 멸종반란은 기존 상근활동가 중심의 사회운동 조직과 많은 점에서 다르다. 어떻게 이런 모델을 발명 및 확산하고 또 서로 연결할 수 있을 것인가?

상상력이 부족한 게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집행력은 우리의 의지에 비해 언제나 부족하지만,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는 선택할 수 있다. 기후운동이 끼리끼리의 모임을 넘어 보다 확장하기 위해 필요한 건 상상력만큼이나 새로이 연결되지 않으면 망하고 만다는 절박함일지 모른다.

2. 연대체 운동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현 상황에서 기후위기비상행동과 기후정의동맹, 그리고 9월 기후정의행동 조직위원회라는 고유명을 쓰지 않고, 이를 논하는 것은 별 도움 안 되는 뻔한 이야기로 귀결될 것이다.

제안에 앞서, 연대체 운동의 현재 좌표를 살펴보자. 하나.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기후정의동맹 출범 이후, 단일 상설 연대체로서의 지위를 상실했다. 둘. 924 기후정의행동 조직위원회는 기후위기비상행동과 기후정의동맹의 조직력에 기반한 동시에, 일정 정도 이를 넘어서는 조직 성과를 남겼다.

예년에 비해 기후위기비상행동의 집행력은 눈에 띄게 상실되고 있다. 정책팀은 해체되었으며, 다음 해에 사무국 단체를 맡겠다고 자원하는 단위도 없다. 924 이후에도 집행위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지 못했다. 924 조직위를 통해 확인한 기후운동에 대한 사회운동의 호응과 대중적인 이슈성을 생각했을 때, 단순히 사회운동 판에서 연대체의 숙명이란 그런 거지라고 답할 수는 없다. 혹은 기후정의동맹 출범 이후 기존 집행위원들의 이탈(실질적으로 동맹 집행위원의 절반 이상은 비상행동의 집행위원이지 않았나)이라고 남탓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원인이 무엇이든, 당분간 기후위기비상행동의 집행력이 쉬이 회복될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기후운동 내에서 2019년 이후 (정책이 되었던 기업이 되었던) 공동의 타격 목표를 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리고 다양한 지역 조직과 연계하여, 전국적 행동의 밑거름이 되어왔다. 그리고 이는 기후위기비상행동이 단일 상설 연대체로서의 지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동맹이 출범하고도 여전히鄧치로는 최대 규모 연대체일지 모르지만, 마치 흰코끼리처럼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다. 비상행동이 집행력을 상실하거나 해체하는 일은 비상행동 소속 집행위원들이 알아서 할 일인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조직 경쟁을 좋아하는 활동가는 많지 않지만, 앞으로 비상행동-동맹으로 이원화된 구조에서 미조직단위들은 두 단위를 놓고 고민해야 할 일이 생기게 마련이라 걱정이 앞선다. 기후위기비상행동과 기후정의동맹이 연대체 이름을 내려놓고 9월 조직위를 구성한 것은 갈등을 우선 묻어두는 봉합책에 다름 아니었다.

모든 운동의 모든 국면에서 단일 상설 연대체가 해법이 될 순 없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비상행동과 동맹이 어떤 형태로든 재결합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한 기후위기라는 문제는 두 연대체 사이 공동의 테이블을 요청하고 있다.

924에서 우리는 새로운 동력을 발견했다. 이 동력을 비상행동이든, 혹은 다른 상설 연대체로든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 고립되어 서로 공멸하지 않으려면, 924 이후에도 두 연대체가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또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3. 거버넌스 전략/태도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거버넌스 일반에 대해 알리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면, 실은 보다 핵심적인(혹은 노골적인) 질문은 민주당과 거버넌스를 할 것인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금처럼 진보정당의 수권가능성이 바닥을 치는 요즘, 나는 우리가 압도적인 정치적 권력을 획득하기 전까지 모든 거버넌스를 거부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생각한다. 비판과 사퇴를 넘어, 조금이라도 유의미한 개입이라도 할 수 있다면 해야하지 않겠나 싶다. 또한 정치적인 입장/표명과 별개로, 다른 방식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우군을 적으로 돌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보다 이 자리에서 공유하고 싶은 건, 우리가 탄소중립위원회 사례에서 얻어야 할 거버넌스와 관련한 교훈이다. 탄소중립위원회는 기후운동에서 거버넌스를 이야기하기 위해, 가장 먼저 꺼내들어야 할 이름이다. 우리는 결과적으로 탄중위 대응에 실패했다. 종교계 및 시민사회 위원 사퇴라는 소정의 성과가 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그 자리는 원전 마피아들이 채웠다.

2019년 기후위기비상행동 결성 당시, 3대 요구 안 중 하나는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독립적인 범국가 기구를 구성하라”였다. 이 요구는 다른 요구안과 마찬가지로 한참 뒤틀린 방향으로 실현되었다. 바로 탄소중립위원회다. 당시 탄중위 해체냐 압박이냐를 두고 기후위기비상행동 내에서 의견 갈림이 있었고, 당시 설립된 탄중위 해체 공대위는 기후정의동맹의 모태가 되었다.

탄중위 출범 이후 사회운동 내에서 기후정의를 외치는 세력과 제도권 내 기후위기 대응 세력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듯 하다. 당시 노들섬에서 열린 탄중위 전체회의에 맞서, 기후운동 활동가들이 결집했다. 회의를 막기 위해 도로 위에서 온몸으로 부대끼는 시위대와 회의를 마치고 높은 육교 위에서 정장을 입은 채 이들을 내려다보는 시민사회 위원의 모습은 큰 대비를 이루었고 이는 기후정의운동의 원초적 장면 중 하나가 되었다.

이 지경까지 오지 않기 위해 무엇이 필요했을까? 내가 얻은 교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거버넌스 참여/불참 결정은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총장과 녹색교통운동 송상석 녹색교통운동정책위원장,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등은 비상행동 소속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논의 없이 탄소중립위원회 시민사회 위원으로 결합하였다. 공동의 전략 없이 개별적으로 결합하였기에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고, 위원으로의 참여한 성과들은 전혀 사회화되지 못했으며 정보들이 유통되지 못했다.

둘째, 거버넌스 전략에 대해 보다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다. 탄중위 해체를 요구할 것인가에 대해 당시 비상행동에서는 짧은 토론 이후에 설문을 통해 의사결정을 했는데 찬성과 반대의 표차가 크지 않았다. 이때 시간이 더 걸리고 때론 불편할 지라도, 더 많은 토론과 설득 과정을 통해 입장을 좁혀갔으면 어땠을까 싶다. 여전히 사회운동 내에서 거버넌스에 대한 입장차가 존재하고, 이는 좁히기 힘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토론을 통해 서로 용인할 수 있는 선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

4. 기후정의 및 체제전환의 상은 무엇인가?

동문서답일지 모르겠다만, 기후정의의 상(像)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기후정의’와 관련하여 사람들과 이야기하다보면 딱 두가지 반응으로 나뉜다. 첫째, 보통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인데 ‘기후정의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다. 좋은 말 같긴 한데, 무얼 하자는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다. 둘째, 주로 활동가들이 비공개석상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쟤들은 기후정의 개념이 뭔지도 모르고 기후정의라는 말을 쓴다’는 뒷담이다. 이로써 활동가든 비활동가든 소수의 ‘진정한’ 기후정의 활동가를 제외하곤,(무려 3만여 명이 참여한 행진의 이름임에도!) 기후정의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기후정의란, 적어도 아직까진 그리 효과적인 단어가 아닌 듯 하다. 사람들은 기후정의라는 말을 듣고 기후부정의를 떠올리며 분노하기 보다, 어리둥절하기 십상이다.

기존처럼 ‘기후위기 대응’만을 이야기해서는 기술주의적인 방식과 시장주의적인 방식을 넘어서기 힘들다는 데에 동감한다. 그리고 탄탄한 운동이 뒷받침되어 기후정의라는 말과 개념이 익으면 해결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직까지 기후정의라는 말이 운동과 시민의 언어로 자리잡지 못한 것만은 분명하다.

체제전환과 관련하여서는 말 그대로 말을 덧붙이고 싶다. 체제 앞에 삶-을 덧붙여 삶-체제의 전환. 문화연대에서 활동하며, 비단 기후 이슈 뿐만 아니라 삶-체제의 전환을 많이 이야기하곤 한다. 체제의 성격(신자유주의라거나 냉전의 장기지속이라거나)만큼이나 체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 의식이 투영된 표현이다. 삶-체제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는 일상과 체제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고 서로 되먹임하는 것으로 바라볼 것을 제안한다.

정책을 비판하고, 기후악당을 타격하고, 권력을 쟁취하는 류의 활동 만이 체제를 바꿀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삶의 양식 즉 문화를 전환하지 않고서야 있지 않고서야 체제를 전환할 수 없다(물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생태문화적인 관점에서 삶을 재편하고 공동체의 시민력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 공급자(활동가)와 향유자(일반 시민)으로 이원화된 구조를 넘어, 모두가 기후시민으로서 거리 뿐만 아니라 각각의 자리에서 삶-체제 전환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

5. 내후년 총선까지의 기후운동/정치의 전략은 무엇인가?

난망한 질문이다. 짧은 기후운동 활동가로서의 경험을 비추어보았을 때, 대선이든 총선이든 유의미한 개입을 한 적이 없다. 그동안 선거를 앞두고 입장을 내고, 후보들의 정책을 평가하고(실질적으로 내거티브 캠페인이라 할 수 있다), 대안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도

마련하였으며, 지역을 순회하며 간담회 등을 열어왔다. 가까이서 진보정당간 일종의 연합을 꾸리려는 시도도 봐왔으나, 조용히 사라졌다. 하던 대로 한 게 문제일까, 혹은 자원이 부족한 걸까? 더 치밀하고 치열한 평가를 해봐야겠다.

내년 여름이 지나면, 모든 담론들이 총선으로 빨려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전 선거들처럼 존재감 없는 혹은 오히려 표를 깎아먹는 이슈 취급 받지 않으려면 기후위기를 표가 되는 의제로 등장시켜야 한다. 미래의 이야기라거나, 국격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의 먹고 사는 문제로 끌어내려야 한다.

또한, 진보정당과 기후운동을 적극적으로 연결해야 한다. 공동의 테이블을 만들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공동의 정치는 코 앞에 선거를 앞두고 몇 번의 협상 테이블로 만들 수 없다. 이런 뻔한 이야기를 뛰어넘는 실천이 필요할 텐데, 비관이 앞선다.

이영주 / 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활동가 전국결집

2019년 9월 21일,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기후위기, 지금 말하고, 당장 행동하라”는 슬로건 아래 집회와 행진을 조직하며, 세 가지—기후위기 상황을 인정하라, 배출제로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라, 독립적인 국가기구를 설립하라—를 요구했으며, 형식적인 수준에서는 이를 모두 쟁취했다. 그러나, 현실에서 기후위기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기후위기는 현 사회의 일부 시스템을 수정보완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윤의 극대화와 효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체제에서의 필연적 결과이기 때문이다.

모든 현상에는 원인과 증세가 있다. 감기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가면 증세를 물어본다. 감기는 하나의 증세만 나타내는 경우는 없다. 복합적이다. 열이 나고, 기침을 하고, 몸이 쑤시고, 축고, 가래가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종합적 진단을 하고, 증상에 따라 처방한다. 만약, 감기에 걸렸지만, ‘기침하는 사람만 모이세요. 기침이 감기의 주요 증상이예요.’ 라고 말한다면, 이는 내부를 분열시킨다. 그냥 ‘모든 감기환자’라고 통칭을 해야, 모두를 모을 수 있다.

기후위기운동에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자.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는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난개발에 맞선 지역주민, 기후정의를 실천하는 농민, 차별에 맞서 평등을 요구하는 성소수자, 툰베리를 비롯 기후정의 실천에 앞장서는 학생과 청년들, 그리고 다양한 운동진영.

이들의 공통점은 기후위기로 인한 직접 피해 당사자, 사회적 소수자, 학생과 청년, 그리고 교사, 학부모를 비롯 기후위기 운동의 주체와 직접 연관되는 사람, 체제전환을 요구하는 운동진영이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불안정노동자의 참여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뭘까?

2019년 노동조합 조직 현황 / 2020.12.30. 고용노동부

※ 조합원 수 등은 단위노조에서 신고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사업체 규모별 조직현황

구 분	30명 미만	30~99명	100~299명	300명 이상
임금근로자수(명)	12,067,739 (58.3%)	3,990,581 (19.3%)	1,983,521 (9.6%)	2,647,908 (12.8%)
조합원수(명)	9,402 (0.1 %)	68,521 (1.7 %)	176,843 (8.9 %)	1,451,438 (54.8%)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에게 ‘기후위기 투쟁에 함께 합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잔인한 폭력이다. 기후위기를 설명하기보다, 우선 물에서 건져내야 한다. 당신의 오늘과 기후위기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살려낸 다음에 할 일이다.

당장 오늘 하루를 살기가 어렵고, 내일 죽을 결심을 수도 없이 하는 사람들에게, 10년 뒤에 우리 모두 죽을 수도 있다는 기후위기는 얼마나 한가롭고 먼 이야기인가! 학생/청년, 그리고 안정적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겐 기후위기는 엄청난 재난이고 나의 행복한 삶에 대한 협박이지만, 당장 오늘 수입이 없고, 해고를 당하고, 일자리를 못 구하고, 직장에서 갑질을 당하고 있는 노동자에겐 이는 아주 먼 미래의 일이다. 기후위기 투쟁에 참가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그가 무지해서가 아니라, 오늘의 삶이 기후위기보다 더 잔인하고 절박하기 때문이다.

기후위기는 증상일 뿐이다. 그렇다면 원인으로 대중을 모아야 한다. 기후위기라는 하나의 증상이 아니라, 이윤의 극대화라는 자본주의 체제를 원인으로 해서, 피해 받는 당사자들, 모두 모여라! 각각의 증세는 다르지만, 모두의 교집합으로 기후위기를 잡는 것이 필요하다. 현 자본주의 체제의 피해 당사자를 모두 호명해서, 그 모두를 주체로 세워야 한다. 최전선의 당사자 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피해당사자임을 인지해야 한다.

기후정의실현과 체제전환은 같은 말이다. 우선 기후위기 운동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이를 인식하도록 내부의 교육과 선전이 필요하다.

작년 9월 세계청소년들의 연대모임 [미래를 위한 금요일]은 [#체제를뿌리뽑자] 해시태그로 ‘소수를 위한 자본주의 체제를 뒤엎자’며 기후행동을 진행했고, 지난 3월 25일에는 [#이윤말고사람]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기후투쟁은 계급투쟁’이라는 선언을 하며 경제성장을 위해 자연생태계와 사람을 착취해온 자본주의 체제의 변혁을 요구했다. 이는 급진적인 요구라기보다는, 다양한 주체들을 피해 당사자로 호명하는 과정이다.

2019년 9월, ‘기후파업’에 구글·아마존·페이스북·트위터·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산업 노동자들이 테크기업들의 반환경적 정책을 비판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협평성 및 다양성, 투명한 의사결정, 노동환경, 직원 평가 등 열악한 노동자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노동현안과 기후위기를 하나로 연결한 좋은 사례이다.

1. 노동현장 조직화 전략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노동자의 생존권적 요구와 기후위기 요구, 체제변혁 요구를 어떻게 하나로 연결시킬 것인가가 핵심이다. 머리가 아니라 감성이어야 하며, 대중의 삶과 연결되어야 한다. 대중이 ‘이것은 나를 위한 투쟁이다!’라고 느껴야 한다. 체제전환을 요구하는 모두를 기후위기로 모아내야 한다.

예를 들어,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을 목표로 조직화를 시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미 ‘학교파업’은 기후위기에서는 보수언론도 사용할 정도로 보편적인 언어가 되었다.

2008년의 일제고사 투쟁은 교사와 학생/청소년, 시민의 주체적 연대로 진행된 투쟁이다. 교사가 학생을 조직한 것이 아니라, 학생/청소년, 시민/학부모가 피해 당사자로서의 주체적인 역할을 하며 연대한 공동사업이다.

기후위기에서 학생/청소년은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데, 청소년 주체들이 대상화되지 않고 함께 실천을 만들어가기 위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청소년-학부모-교사-학교비정규직 등 학교 구성원들이 각자 주체가 되어 함께 준비해나가는 것이다.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은 학교 구성원들이 공동의 기후위기요구와 각자의 요구를 연결해 함께 운동하는 중요한 전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 과정은 기후위기 뿐 아니라, 각자의 요구를 전체의 이름으로 묶어준다. 이는 참가자 전체를 성장시킨다. 운동은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이다.

2. 연대체 운동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아래 자료는 2015년 민주노총에서 주도하여 만든 민중총궐기 운동본부의 요구안이다.

박근혜정부의 노동개악을 저지(좋은 일자리 쟁취)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지만, 이를 위해 각 당사자주체의 요구를 함께 담아 공동요구안으로 만든 자료이다.

한눈에 보는 #민중총궐기 요구안	
#일자리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 중단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모든 시민의 사회안전망 강화
#재벌책임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재벌 사내보유금 환수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등 재벌 사용자 책임
#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밥쌀 수입 저지 / TPP 반대쌀 및 농산물 적정 가격 보상

#만성빈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점단속중단, 순환식 개발 시행 장애인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민주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안탄압 중지, 국가보안법 폐지, 국정원 해체, 양심수 석방 역사왜국 중단, 역사교과서 국정화 계획 폐기
#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별금지법 제정, 여성·이주민·장애인·성소수자 차별 및 혐오 중단 국가인권위 독립성 확보, 정부 및 지자체 반인권행보 중단
#자주평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북적대정책폐기, 남북관계개선 5.24조치해제, 민간교류보장 한반도사드배치반대, 한미일삼각군사동맹중단, 일본의 군국주의 무장화 반대
#청년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벌 곳간 열어 청년-좋은 이자리 창출 요구 대학구조조정 반대
#세월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월호 온전한 인양,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안전사회 건설
#생태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 계획 폐기 신규원전 건설 저지 / 노후원전 폐기
#사회공공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 철도 가스 물 민영화 중단 제주 영리병원 추진 중단, 공공의료 확충

기후위기운동도 마찬가지이다. 기후위기만으로 모이라고 강요하기보다는, 기후위기에 동의하는 모두, 기후위기라는 증상의 ‘원인’으로 피해 받은 모두를 모아내야, 운동이 확장된다.

3. 거버넌스 전략/태도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미응답)

4. 기후정의 및 체제전환의 상은 무엇인가?

2016년 처음 촛불광장이 열리기 시작했을 때, 당시 연대체의 집행부는 ‘박근혜퇴진’을 구호로 확정하지 못했다. ‘참가한 대중들이 거부감을 느낄 것’이라는 주장과 ‘대중들이 동의하지 않는 구호이다’가 주요 반대 이유였고, 최종 합의된 것은 ‘하야하라’였다.

그런데, 그날 집회에서 일부 참여자들의 구호선창으로 자연스럽게 ‘박근혜 퇴진’이 나왔고, 참가한 대중들은 모두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 당시 대중의 분노를 담아낸 구호는 ‘하야하라’가 아니라, ‘퇴진’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연대체 집행부는 ‘퇴진’으로 구호를 확정한다.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간부’들이 대중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선전하지만, 대중의 분노가 표출되는 시기에는 대중이 ‘간부’를 선도한다. ‘간부’들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너무 많은 것을 계산하느라, 자신의 고민과 걱정에 갇혀버린다. 또 하나 대중에 대한 불신이 있다. 대중을 대상화 한다. 본인은 대중이 아니기 때문이다.

2017년 촛불이후 문재인정부를 거치며, 체제전환의 요구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집권정당만의 전환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체제전환이 필요하다는 확인을 거친 셈이다. 그럼에도 ‘현 체제의 문제는 무엇이고, 새로운 체제는 어떤 사회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이 존재한다. 단지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현재 사회시스템은 바꿔야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운동진영의 소극적 태도가 확인된다. ‘이윤의 극대화와 성장 중심 경제’가 문제라고 말하면서, 그 체제가 ‘자본주의’라고는 명명하지 못하고 있다. 재벌이 문제라고 말하면서, 그런 행태를 보호하고 있는 ‘자본주의’는 소환해내지 못하고 있다. 결국, 말장난이다.

기후정의 및 체제전환의 상은 반자본사회다. 이를 명확히 해야 자본대 반자본의 전선이 만들어진다. 그래야 기후위기 운동의 주체가 최대로 확대될 수 있다. 기후위기운동에 참여하나 자본주의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자본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면, 그를 위해 운동의 수위를 조절할 것이 아니라, 그를 변화시켜야 한다. 오히려 기후위기를 통해 자본주의의 문제를 인식하고, 체제전환에서의 ‘체제’는 자본주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기후위기는 동의하나 체제전환은 원하지 않는 사람을 중심에 놓고, 기후위기 운동을 진행하는 것은 기만적이며, 운동의 지속가능성과 확대를 담보해 낼 수도 없다. 이는 결국 대중을 대상화 하는 태도이다. 대중은 경험을 통해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한다.

5. 내후년 총선까지의 기후운동/정치의 전략은 무엇인가?

2015년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로 확정했다. 2012년 우리나라의 최저 임금액은 시간당 4,580원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38%였고, 2015년 최저임금은 5,580원이었다. 당시, [최저임금 1만원]은 2배로의 인상을 주장하는 비현실적인 요구라는 비판이 노동계 안에서도 많았다.

그러나 최저임금 대상자들은 환호했다. 그것이 성사되던 안 되던 결과가 중요하지 않았다. 어차피 밀져야 본전이다. 그 정도의 임금은 받아야 한다는 억울한 마음이 위로되었다. 이것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마음을 반영하고, 사회 속에서의 존재를 확인시킨 요구안이었다.

그 이전까지 최저임금은 평균임금의 50%, 장기적으로는 평균임금의 60% 수준까지 높여가자는 게 목표였다. 그런데, 저임금노동자들은 왜 평균임금의 50%만 받아도 되는 걸까? 왜 최저임금 노동자의 노동의 가치는 저평가 되는가? 과연 그 임금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최저임금 1만원] 요구로 인해 노동계에서 최저임금 투쟁은 집중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었고, 전사회적 쟁점이 되었다. 2017년, 대선후보들은 모두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하였다.

올해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확정되었고,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1만 580원이다. 물론, 아직도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임금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최저임금의 인상은 불가능에 도전한 운동방식의 결과이다.

기후위기운동의 정치적 전략은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야 한다. 가능한 요구는 실무적으로 할 수 있으나, 그것으로 기후위기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명확한 요구로, 실제 대중에게 기후위기 운동의 단기적 목표와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 기후위기운동에 참여하는 대중의 가슴이 뛰어야, 선명한 목표가 생겨야, 전사회적인 이슈로 만들 수 있다. 그래야 정치권으로부터 구체적인 공약을 끌어낼 수 있다. 결국 대중의 힘이 변화의 가능성을 만든다.

정록 / 인권운동사랑방

1. 지역/시민/노동현장 조직화 전략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조직화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정식화된 무엇을 이야기하긴 어렵지만, 인권단체로서 기후정의운동의 대중화, 조직화를 위해서 고민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먼저, ‘조직화’도 기후정의운동의 정치적 요구나 정세와 더욱 긴밀하게 연결해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지역/시민/노동현장’ 고유의 조건이나 조직화 양식이 있을테지만, 당연하게도 기후운동의 조직화/대중화는 기후정의운동이 어떤 요구와 투쟁을 통해 ‘정세’를 만들어내느냐에 달려있다. 2019년 9월 행동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기후운동은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는 오랜 기간 이루어진 계획적인 ‘조직화’ 작업의 결과였다기보다는, 이미 대중들 사이에서 기후위기/기후행동에 대한 문제의식이 상당히 고양된 상황에서 이를 모아낼 정치적 요구와 행동의장을 펼친 것이 주요했다. 올해 ‘924 행진’ 역시 ‘기후정의’를 전면에 내걸면서 특정한 부문이나 의제로서 ‘기후’가 아닌 광범위한 사회운동의 장이 되도록 판을 깔았기 때문에 대규모 조직화가 가능했다. 내년 대회의 대규모 조직화도 결국엔 내년 대회가 기후/사회운동에서 어떤 자리로 준비되고 어떤 정세를 만들어내느냐에 달려있다.

이와는 다른 결에서 조직화 고민을 덧붙이자면, 기후정의운동이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조직하기 위한 대중적인 ‘서사’와 ‘프레임’이 더욱 고민되고 개발되어야 한다. 여전히 ‘기후/에너지’는 어렵고 전문가 영역이며, 기후정의를 통해 여러 주체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 역시 ‘피해자/취약계층’에 불들리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길이고 대안이라고 선언’했다면, 기후정의주체들의 관점에서 현재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에 맞서 싸워야 하며, 우리가 왜 그런 권리가 있는 것인지 우리의 이야기로 풀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

2. 연대체 운동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연대체 운동은 무엇을 위한 어떤 연대체냐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이번 924 기후정의행진을 중심으로 돌아본다면 몇 가지 특징과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 조직위에 400개 이상의 단체들이 함께 했고 많은 단체 수만큼이나 활동의제나 영역이 다양했고 정치적 스펙트럼도 넓었다. 그럼에도 924에 함께 모여 공동의 기치로 ‘기후정의’를 외쳤다는 점, 단체 분담금 납부율이 90%를 넘을 정도로 함께 구성한 연대체에 대한 책임감을 확인한 점은 이번 행진의 성과이다. 동시에 이러한 성과는 내년 투쟁을 어떤 그림으로 준비하느냐에 따라 고민지점이

될 수도 있다. 이번 924에 대한 평가 중에 요구의 추상성, 맞서 싸우는 구체적 대상의 부재 등이 이야기되었는데, 요구를 좀 더 뾰족하게 하는 과정은 정치적 차이가 확인되면서 공동의 실천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과정이다. 또한 상설연대체가 아니라, 한시적인 기구이다보니 짧은 시간에 안정적인 집행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집행위는 ‘논의’보다는 ‘집행’을 위한 단위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3. 거버넌스 전략/태도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기후의제 제도화에 대한 ‘기후정의운동’의 개입/협력과정을 ‘거버넌스’라고 할 때, 전략과 태도는 ‘얼마나 잘 제도화’할 것이냐가 아니라 기후정의운동의 성장과 확대의 과정으로 작동하느냐가 되어야 한다. 정부나 지자체가 흔히 ‘위원회’ 체계를 통해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시민사회’의 협력 또는 동의이다. 이는 기후운동에게는 현실/현장에 대한 개입 가능성이 되기도 하고 포섭의 경로가 되기도 한다. 대부분 정부/지자체/기업의 압도적인 우위 아래 거버넌스는 구성되기 마련이며, ‘개입/견인’이라는 전략이나 목표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기후정의운동은 이미 기울어진 거버넌스 체계 안에서 정책이나 법률의 조항과 문구 수정을 목표로 협상/타협을 할 게 아니라, ‘거버넌스 체계’의 문제점 자체를 운동의 의제로 만들거나, 거버넌스 체계에서 논의/결정될 수 있는 의제 자체를 바꿔내는 투쟁을 벌이거나, 거버넌스를 매개로 다양한 기후정의운동이 연결되고 결집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게 필요하다.

4. 기후정의 및 체제전환의 상은 무엇인가?

‘기후정의’, ‘체제전환’이라는 말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 하지만 각자 목적하는 바에 따라서 편의적으로 쓰는 경향도 강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미 ‘탄소중립녹색성장법’에서 기후정의를 취약계층 지원의 의미로 쓰고 있다. ‘체제전환’도 반자본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 2.0의 의미로 사용하는 사례도 많다. 화석연료 기반 자본주의를 재생에너지 기반 자본주의로 또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으로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을 촉구하는 ‘자본주의 체제전환’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자본주의/시장경제가 자연질서와 다를바 없는 이들에게는 그럴 것이다.

하지만 ‘기후정의’, ‘체제전환’은 기후정의운동의 투쟁 속에서 등장한 구호이자 지향이다. 기후정의운동은 기후위기의 책임과 피해가 지역(북반구/남반구), 계급, 인종, 젠더에 따라 나뉘는 부정의한 상황에 맞서 ‘기후정의’를 외쳤다. 또한 기후위기를 특정한 집단/지역/국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역사적이고 특수한 사회시스템이 만들어낸 문제로 규정하면서 ‘자본주의’라는

체제의 변혁과 전환을 요구해왔다. 체제전환의 상은 ‘자본주의’라는 문턱을 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자본주의의 변형이나 전환이 아닌 ‘반자본주의’에서 체제전환은 시작될 수 있다.

5. 내후년 총선까지의 기후운동/정치의 전략은 무엇인가?

총선은 대선과 더불어 가장 커다란 제도 정치의 장이다. 특히 선거 공간은 후보 없이 활동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후운동이 구체적인 정치전략을 세우고 가동시킬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그래서 시민사회운동은 전통적으로 정책평가나 정책협약 중심으로 선거대응을 해왔지만, ‘정당’, ‘정치세력’에서 중립적인 ‘정책’이라는 게 과연 실현가능한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 그렇다면 ‘기후운동’은 제도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될 수 있을지 질문하게 된다

권우현 / 환경운동연합

1. 지역/시민/노동현장 조직화 전략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924 기후정의행진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기후·환경 위기에 대한 감수성을 상당한 수준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과, '기후정의'가 다른 여러 사회 의제들과 교차하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하지만 향후 조직화라는 과제 안에는 몇 가지 또 다른 당면 과제가 내재되어 있다.

먼저, '조직화'란 무엇인가. 연대에 참여한 다양한 조직의 구성원을 단순히 많이 모아내는 것을 조직화라고 이해하는 것은 '협의'이다. 그러니까 여러 조직이 자기 의제를 기후위기에 접목시켜 행진에 참여했다거나, 각 조직이 소속 조합원·회원 등의 구성원을 집합시키기에 우리의 구호와 요구가 용이했다는 것만으로 지난 9월의 행진의 조직화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만은 없다는 뜻이다.

그러한 결합이 가능했던 것은 도리어 현재 통용되는 '기후정의'의 개념이 어떤 사회정의 지향과도 연결될 수 있도록 느슨하고 폭이 넓었던 까닭이다. 가끔 너무 큰 정의는 기실 아무런 정의도 뜻하지 않을 수 있다. 어떤 운동에 '이것이 기후정의다.'라는 구호를 붙였다고 해서 그 운동이 진정한 의미에서 기후운동의 우산 안에 조직된 것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하고 안이한 판단이다. 그 운동을 지탱하는 구성원들이 기후운동가 내지는 적극적 지지그룹이 된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더더욱 어렵다.

물론 기후정의를 기치로 내건 집회에 나온 3만여 명 사람들의 삶과 시각은 그 이전과는 명징하게 다를 것이다. 그것은 운동의 성과다. 다만 그 숫자가 '운동 그룹'을 중심으로 조직한 기후정의행진의 최대 파이였는지도 모른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기후운동은 이제 각 운동 영역의 바깥에 있는 시민들과의 조응을 기도해야 한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어디에 있는가. 지역에 있고 작업장에 있고 농토와 바다에 있고 학교와 가정에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민들이 전통적 의미의 '조직'에 포섭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기후정의에 관한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시민들이 조직되기를 원하느냐는 것이다. 가령 시민은 특정한 가치에 동의하거나, 자기 이익에 부합할 것으로 여겨지는 조직의 조합원이 되거나 후원회원이 되어 일정한 비용을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시민들의 '참여' 방식은 그런 전통적인 방식을 점차 벗어나고 있다. 나아가 그들이 일시적이거나 간접적인 지지를 표명하는 것과, 강력한 지지그룹으로 조직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전자가 꼭 부족하거나 미진한 조직화라는 뜻은 아니지만, 장기적 전환 운동인 기후운동의 특성상 후자의 강력하고 파급력 있는 조직화가 필요한 터다.

다른 한편, 시민들과 기후운동 진영의 온도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 기후정의행진은 체제의 종식(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건)을 표방하였다. 반면 많은 시민들은 여전히 일상에서의 작은 실천, ESG, SDGs 등과 같은 환경관리주의적 관점에서 기후위기에 관심을 기울인다. 이는 단순히 시민과 운동 진영으로 분리할 수도 없으며,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내부의 운동조직들 안에서의 온도 차이이기도 하다. 이것은 말하자면 조직화의 질적 측면이다.

즉 생명파괴·화석연료 체제의 본질적 문제를 간파하고 성장주의를 패퇴시키자는 ‘급진적’ 메시지를 확산시켜야 하는 동시에 이 메시지를 기반으로 결속력을 가진 강력한 그룹을 형성하는 일까지를 기후정의 운동의 조직화로 이해해야 한다.

기후 문제로 시민들과 접촉면을 넓히는 가장 전통적인 접근방식은, 생명 보편의 문제로서 기후위기가 표상하는 ‘지속가능성’에 기대는 것이었다. 이것은 시민들에게 친숙한 메시지로 확정성을 지닌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렇게 조직된 사람들은 대부분 쓰레기 줍기나 천연 제품 만들기 같은 일상 실천 운동에 머무를 공산이 크다. 개인 효능감 이상의 운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더이상 기후운동의 핵심적 조직화 전략이 될 수 없다. 요컨대 기후운동은 현상적이고 파편화된 기후·환경 문제를 넘어 위기의 본질을 드러내야 한다.

물론 이 조직화에는 다양한 층위가 있다. 담론의 영역에서 거대 조직들과 정당, 학계, 언론 등이 이 ‘체제의 모순’이라는 진단에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쟁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자면 탄소중립·녹색성장, ESG, SDGs 등과 같은 허울과 먼저 대립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것들은 기성 체제가 기후위기와 관련된 온갖 좋은 말을 주워섬기는 척, 기후운동을 포섭하는 기제다. 그렇게 위기의 본질인 ‘체제의 모순’으로부터 논점이 이탈된다.

다른 면에서는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개인들을 설득하고 모아내야 한다. 기실 이것은, 기후운동의 전략 범위를 벗어나는 논의다. 원래도 조직을 넓혀가는 일은, ‘시민 없는 시민운동’, ‘노조 혐오’, ‘정치 혐오’와 같은 각 조직의 당면 과제였던 까닭이다. 기후 의제를 운동 논리 안에 더 깊이 내재화시키거나 기후위기를 전면에 내건다고 단박에 해묵은 과제가 해소될 것 같지 않다. 시대적 조건 상 기후운동의 조직화는 필연적으로 ‘기후 담론의 확대’와 ‘참여 운동의 변모 실험’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2. 연대체 운동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각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그리고 9월 기후정의행동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집회를 중심으로 기후운동은 크고 넓은 연대체를 형성해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연대에 참여하는

조직들이 기후위기를 자기의 의제로 소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초기에는 환경단체들이 이 연대 조직들을 주도하였지만, 최근에 이르러서는 보다 다양한 그룹이 연대의 주축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기후 운동이 당면한 '현안'은 분명하다. 신규 석탄발전소의 건설, 산업부문 온실가스의 막대한 배출량과 배출 책임, 신공항 등 대규모 토건 사업 등과 같은 현안들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기후운동 연대체가 이러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기구로 작동해야 하는 것일까. 924 이후 탈석탄법 제정 국회 청원의 드라마틱한 성사는 연대가 그러한 현안에 대해 선명하고 실체적 힘을 보여줄 수 있음을 확인하게 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너무나 다양한 의제를 가진 대규모 연대체가 상설화되어 작동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의제 교차성이 확대되고 실제 활동가와 지지그룹의 학제적 시너지를 기대할 수도 있겠으나, '주요 현안'의 지위를 둘러싼 의제 간 경쟁이나 비대한 조직으로 인한 운동의 교착 등의 우려도 적지 않다.

오히려 기후운동의 연대체는 '이합집산'의 운동을 펼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이미 각 연대체를 통해 연결고리를 가지게 된 조직과 시민들이 있다면, 기후정의와 직결된 주요 현안에 대한 일성이 터져 나올 때 각자가 응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또한 각자의 운동 영역에서 기후정의가 언어화된다면 오히려 단일한 연대체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조직화도 상상할 수 있다. 기후운동과 그 연대는 비유컨대 '입구가 넓은 모양의 접시'가 되어야 한다.

3. 거버넌스 전략/태도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거버넌스에 대한 일반론적 전략·태도를 논하는 것은 불가하거나 소모적인 일이다. 운동의 전술로서 '거버넌스'는 매우 다양한 국면, 형태, 맥락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가령, 2019년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독립적 범국가 기구 구성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상행동 참여 단체 중 상당수가 '탄소중립위원회'를 거부하고 보이콧한 사례만 해도 아주 특수한 맥락에서 벌어진 일이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실효성 없는 전시성 거버넌스였다는 진단, 그리고 그 구조의 조악함 및 반노동·반농업적 구성과 기만적인 정부 정책 기조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여러 비판이 있었다. 반면,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창구로 활용해야 한다는 실용적 논리도 있었다. 이 논쟁의 과정에서 많은 조직과 사람들 사이에 깊은 골이 생겼다. 이를 상호 간 차이를 확인한 정도로 갈음할 수 있는지, 치명적 결별로 보아야 하는지는 여기서 평가하지 않겠다.

현시점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재구성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소수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채, 전신인 탄소중립위원회의 세부 논의를 판판이 물리치며 작년에 벌어진 논쟁을 모두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 다소 거칠게 작금의 상황이 시사하는 바를 정리하자면, 운동 진영에 다소 친화적인 정치 세력이 집권하였다고 해서(중앙, 지역, 의회를 아울러) 거버넌스를 한마디 더 얹을 수 있는 계기 정도로 삼는 시도가 불성실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도는, 그 정권이 연장될 경우 순치된 운동과 정치의 밀월로 전락하기 십상이고 정권이 교체될 경우 권력과 운동이 함께 몰락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물론 운동의 국면에 따라 효율적으로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각 운동의 맥락에 따라 성공적인 성과를 이끌 수 있음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탄중위를 둘러싼 운동 진영의 보이콧 논란 속에서 특정 지역·진영은 성공적 거버넌스 경험에 기반해 탄중위 활용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특정 현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가 아닌 바에야 정치 권력, 자본 권력이 마련한 의자에 앉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 권력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가 운동의 목소리가 확대되는 자리이긴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연대체 명의로 정부·기업 주도 거버넌스에 참여하거나, 참여할 단위를 주선하는 것은 단호히 기각되어야 한다.

오히려 문제는 탄중위 사례처럼 연대체 내에서 거버넌스의 참여가 문제로 비화되었을 때다. 상급기구가 아닌 연대체는 각 조직에 어떤 결정 사항을 강요할 수 없다. 그렇지만 예리하면서도 유연한 연대를 위해서는 토론의 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주선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난 탄중위 논란을 평가하자면, 가장 아쉬웠던 것은 거버넌스에 참여한 단체나 개별 위원들이 비상행동과 접점이 뚜렷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직접 토론에 참여한 적이 없었다는 점이다.

4. 기후정의 및 체제전환의 상은 무엇인가?

상술했듯 ‘기후정의’가 생명의 위기와 불평등의 문제를 모두 포괄할 때, 기후정의가 말하지 못할 주제도 없지만 뾰족하고 단일한 개념으로 정리될 수도 없다. 더구나 빠른 온실가스 감축과 정의로운 전환이 동시에 이뤄질 해법이 당장 도출되지 않는 경우(예컨대 에너지 시장 개편이나, 제조업 축소 등) ‘기후정의’라는 이름은 더욱이나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924 기후정의행진을 통해 기후정의에 관한 원론적 가이드가 제시되었다. ‘우리의 요구’로 표현된 그것은 다음과 같다. 기후정의가 거시적 담론이기에 아주 촘촘한 가늠자로 기능할 수는 없어도 현재로서는 가장 유용한 원칙이다.

- ① 화석연료와 생명파괴 체제를 종식해야 한다
- ② 모든 불평등을 끝내야 한다
- ③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의 목소리는 더 커져야 한다

다른 한편, 기후운동 진영 안에서 체제전환의 상은 더욱더 분명치 않다. 환경운동연합은 ‘생태민주주의 사회’를 지향한다. 다른 어떤 그룹들은 ‘생태사회주의’를, ‘녹색전환’을, ‘자본주의 성장체제’의 극복을 표방하기도 한다. 이것들의 차이에 대해 첨예하고 유의미한 논쟁을 아직 본 바 없다. 각 조직이 극복하고자 하는 ‘체제’에 대한 안티테제 이상의 세계관을 구성하지 못한 까닭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다.

‘탈성장’에 대해서도 구체적 진단과 대안을 달리하고, ‘(대량의)생산-유통-소비-폐기 시스템’에 대해서도, 기후위기 ‘비용’의 부과와 사용에 대해서도 모두 이해가 달랐으니 교집합이라고는 정말 ‘이대로 살 수 없다’ 정도였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운동의 단위들이 ‘기후정의’나 ‘체제전환’에 관해 모두 비슷한 답을 가질 필요는 없다.

[1.5°C 특별 보고서]가 나온 이래 4년 간 한국의 기후운동이 해온 것이 기후위기를 직시하고 그 대응을 정의롭게 하자는 원론적 합의 정도였다고 짜게 평가한다면, 이제 정말 필요한 것은 오히려 현장에서 각 조직이 ‘기후정의’와 ‘체제전환’이 무엇인지 운동으로서 실천하고 그 운동의 실체를 바탕으로 토론하는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은 더디고, 정의로운 전환의 시스템 구축은 더더욱 더디다. 그렇다면 이제 기업과 정부, 공장과 발전소, 대규모 농축산 시설과 토건현장에서 벌어지는 ‘그 어떤 행동’이 전망을 드러내는 유일한 창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5. 내후년 총선까지의 기후운동/정치의 전략은 무엇인가?

대통령 중심제 아래서의 의회의 역할, 양당 구도의 정치 구조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지 않으면, 기후운동이 총선을 겨냥한 정책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측하는 것은 빤하다. 연대체가 몇 가지 합의된 정책안을 내놓고, 각 조직도 개별적으로 정책 제안을 내놓을 것이다. 이를 토대로 정책 판매형 운동이 전개될 터다. 협약식, 지지 선언, 낙선 운동 등. 운동의 총선 전략이 언제나 셋바퀴 돌 듯 그렇게 되어왔고 기후운동도 그 자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어쩌면 몇 명의 운동가가 더 정치인이 될 수도 있다.

운동의 당면 과제와 정치의 구조적 문제가 단박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에 위와 같은 전략이 반드시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운동가가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그를 중심으로 운동의 제안이

의회에 진출하는 것도 방법이다. 하지만 기후운동이 비록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를 유발한 체제를 겨냥한 운동이라면, 성장주의-자유주의 체제 유지에 복무하는 양당을 모두 극복하는 상상도 필요하다.

그것이 꼭 대안 정당을 찾아 협력하거나, 새 정당을 창당하는 것일 필요도 없을 것이다. 운동이 곧 정치다. 반드시 총선을 계기로 의회 정치를 공략할 필요는 없다. 운동이 제시하는 대안과 전망이 의회 정치의 언어와 전망을 낙후시킬 수 있다면 말이다. 즉, 현 상황에서 기후운동이 총선을 주요한 모먼트로 염두에 두고 전개된다면 유의미한 진전을 찾기 어렵다. 각 정당과 특정 현안에 관해 정책 연대를 하는 것은 개별 조직의 뜻이다. 보다 큰 틀에서 ‘기후운동’이 거기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

김지은 / 전북비상행동

정진영 / 경남비상행동

1. 지역/시민/노동현장 조직화 전략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1894년 1월 전봉준 장군이 고부 농민봉기를 일으켰을 때 결합한 농민의 수가 1000여명이었다. 고종 때 인구수가 670만 명이었다고 하니 0.015%의 농민이 동학혁명이라는 거대한 물결을 촉발시키는 계기를 한 지역에서 만들어 낸 것이다. 대한민국의 현재 인구 수는 5162만 명이니 0.015%는 8천여 명이다.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매우 달라 대한민국 기후운동과 비교할 기준이 되지 못한다고도 말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매우 비슷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체제 전환’. 요구안도 비슷한 맥락인 것이 많다.

- 탐관오리의 횡포 금지 (핵마피아,화석연료마피아,부정의·부패 관료는 지금도 차고 넘친다)
- 노비문서 불태우고 신분제 철폐(대한민국 비정규직 숫자는 2021년 8월 기준 806만6,000명)

착취와 억압의 구조 속에서 계급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2022년 9월 24일 전국에서 3만 5천여 명이 기후위기와 탄소불평등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모였다. 양이 질을 담보할 수는 없지만 0.015%를 훌쩍 넘는 이 수치는 대한민국 기후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실패의 여부를 떠나서 기존 체제를 깨부시는데 불는 ‘혁명’이라는 이름을 쟁취할 수 있었던 동학혁명에 가담한 사람은 100만 명 이상이었다. 스마트 폰도 없고 온라인 줌 회의도 열 수 없는 상황에서 모인 사람들이 집강소라는 민관거버넌스까지 이끌어 낸 것을 보면 이는 2016년 촛불시위보다도 훨씬 의미있는 숫자의 결합이며 기후운동이 목표로 삼을 수 있는 역사적 선례라고 할 수 있다.

동학혁명 당시 분위기는 자본주의 열강의 침탈과 지배층의 착취로 인해 농촌 경제가 파탄에 이르렀고 민족의 불안과 불만이 더욱 팽배해져 갔다. 지금 대한민국은 고령화, 저출산, 고금리, 남북관계파탄으로 그에 못지 않은 정치불안과 민생파탄으로 치닫고 있다. 동학의 인간 평등 사상과 사회 개혁 사상이 새로운 사회로의 변화를 갈망하는 농민의 요구에 부합되었고, 포접제의 조직이 농민 세력의 규합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2022년 대한민국의 기후운동에서 지역/시민/노동현장 조직화 전략은 이 포접제 구조를 활용한 끊임없는 학습과 토론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것은 이번 9·24 기후정의행진에서도 활용된 전략이라 막연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9·24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하기 전에 한살림에서 마련한 ‘기후위기시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꼭 알아야 할 이야기’ 열린배움터에 참여한 조합원 한 분은 장바구니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다녀온 후기를 전했다. 9·24 기후정의행진의 의의를 일반 대중이 참가 전 충분히 학습한

것이다. 이처럼 큰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소단위로 결성되어 그물망처럼 연결된 전체구조가 일상의 정기적인 학습을 이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2. 연대체 운동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10월 29일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경남 민중대회 및 들풀 대동제에 참여해 '윤석열 기후정책 사망', '박완수 기후정책 실종'이라는 구호로 장례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경남에서는 여러 단위들이 결합한 민중대회이자 두 수장을 대상으로 하는 첫 규탄 집회였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가 컸으나 음식을 나눠먹으며 문화제 형태로 진행돼 싸움의 열기가 뜨겁지 않았다.

그보다 앞선 9월 1일에는 민주노총 경남본부에서 하동 발전비정규직 노동자 이야기가 하동 석탄화력발전소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에 대한 설문결과를 발표하면서 진행되었다. 눈물을 흘리면서 고용안정을 말씀하시는 노동자들 앞에서 더 이상의 화석연료는 안 된다며 경남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려는 LNG발전소 저지운동을 벌여나가는 내 모습이 몹시 혼란스러웠고 아무런 대책도 세우고 있지 않는 경상남도에 대한 분노가 일었다. 경남 민주노총을 바로 찾아가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과 함께 도지사에게 항의하고 우리가 먼저 대책을 요구를 하자고 제안했으나 아직 본부에서 기후와 관련된 활동에 전념하기에는 활동가들의 업무량이 너무 많아 보였다.

대통령 선거때 거대양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후위기대응에 많은 비중을 두고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던 진보당이기에 기대하는 바가 큰데 김해진보당에서 11월 24일 민생대회를 열자고 제안이 왔다. 크게 환영하며 민생대회 전 충분한 기후정세 인식에 대해 학습과 소통을 진행하자고 제안했으나 집회준비 초안에는 기후불평등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었다.

개인 역량의 문제이고 업무과중의 문제일 수 있으나 서울에서만 기후문제를 해결하면 기후대응이 되는 것도 아닌데 지방에서는 분위기다 사뭇 다르다.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가 환경단체의 문제로만 인식되는 상황이 자주 벌어진다. 하지만 한 쪽만 섭섭한 것도 아니다. 자본주의, 제국주의가 휘두르고 있는 억압과 착취, 차별의 고리는 모든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고 기후위기 현상도 이 고리의 한 단면일 뿐이다. 따라서 모든 운동은 연결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기후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노동운동을 할 수 없지 않느냐가 아니라 연결점을 이해하고 함께 동참해야 한다. 시민들은 막연히 열정으로 어딘가에 연대라는 이름으로 참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운동과 저 운동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 연결지점들이 현실에서 자주, 크게 일어나기를 바란다.

3. 거버넌스 전략/태도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작년에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그린워싱을 정당화하는 기만적인 기구라고 규정하고 위원들의 탈퇴를 요청하며 해산을 주장한 활동들이 있었다. 이에 대해 정부 정책을 바꿔야 하는데 그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없애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인가 문제제기 하는 주장들도 있었다. 정부와의 거버넌스에서 입장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기후위기가 발생한 근본적 원인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설사 같다하더라도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기후위기의 발생 원인이 자본주의 불평등 구조가 아니라 단순히 탄소의 포화로 본다면 해결책은 완전히 달라진다. 급격하게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탈석탄을 하는데 치중해야 한다. 기존 에너지 체계를 새로운 에너지 체계로 바꾸기만 하면 된다. 그리스는 10월 7일 5시간 동안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수요 100%를 충족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천연가스 소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었지만 사상 최초이고 모든 국가들이 지향해야 할 미래 모습이라는 점에서 눈여겨 볼 만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그리스 민중들의 삶은 이로 인해 얼마나 나아졌을까? 재생에너지 100%를 달성하기 전에도, 달성하고도 여전히 대다수 민중들의 삶이 고달프다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은 누구를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일까? 적어도 태풍에 휩쓸릴 일은 없어서, 폭우에 가진 것 모두를 잃어버릴 일이 줄어들어서 기뻐해야 하는 것일까? 재생에너지 100%를 달성한 상태에서 대부분의 탄소는 누가 배출하고 있을까? 단순한 에너지 전환만으로는 민중의 삶이 더 좋아지지도 이보다 더 나빠지지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많은 것을 희생하고 변화를 바랄 수 없는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것에 의미를 찾지 못하겠다는 생각도 있다.

그러나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해보면 거버넌스는 또 필요한 장치가 아닐까도 싶다. 운동의 결과가 당장에 사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하고 이해당사자들이 다양하게 얹혀 있는 실태를 풀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면 협치라는 중간단계를 마련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도 고민된다. 그래서 거버넌스는 끊임없이 요구하되 원칙이 흔들릴 정도의 내용으로 전개된다면 과감하게 깨고 장외투쟁을 벌여나가는 것도 필요한 전술로 보인다.

4. 기후정의 및 체제전환의 삶은 무엇인가?

9·24기후정의행진에 다녀온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많은 분들이 참가하여 우선 좋았습니다. 지역의 많은 동지들을 만나 좋았습니다. 집행부도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고, 기후운동을 잘 하자고 하는 말이지 우리 운동을 약화시키자는 뜻은 전혀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선 ‘기후정의’라는 단어가 일반인에게 생소하게 다가 오고 막연하다는

생각입니다. 집회에서 나온 발언들을 보면 대체로 기후불평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반지하 문제는 해결하는 데까지 해야죠. 그러나 기후운동가들은 기후위기를 빨리 해결하는 것으로 이런 문제를 접근해야 합니다. 반 지하문제까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빈부차이문제, 장애인 차별문제, 계층간 불평등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을 기후위기와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 우리의 문제 핵심을 흐리게 하고 어렵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석탄발전소를 중단하고 태양, 풍력확대를 주장해야 합니다. 실천 방안으로 전기요금을 대폭 올리는 일을 주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석탄 발전소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석탄발전소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정의로운 전환입니다.

농민을 어렵게 하는 농촌태양광도 정의롭지 못하고 어민을 어렵게 하는 해상풍력도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자본주의가 기후위기의 주범임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자본주의 타파만이 기후위기 해결책인 것처럼 주장하면 기후위기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후위기 막을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입니다.

석탄발전 중단하려면 태양광, 풍력 설치 하지 않으면 불가능 합니다. 나부터 설치할테니 너도 설치해라가 정답입니다. 전기 많이 쓰는 너부터 해라는 해답이 아닙니다. 기후위기의 싸움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힘 없는 자와 힘 있는 자의 싸움으로 가면 곤란합니다. 자본주의가 기후위기 주범이니까 자본주의 체제를 엎어버려야 기후위기 막는 길이다는 것은 그냥 다 죽자는 것입니다.

어제 집회에서의 주장은 우리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향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제 집회에서 연설한 한살림생산자회장은 집회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주장하는 것이 뭔지 모르겠고 방향이 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어제같은 집회에서 전기요금 대폭 인상을 요구했어야 합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지도부의 전략 변경을 요구합니다.“

9·24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와 같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다.

얼마 전, 정부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을 단행했다. 이 돈은 탈석탄을 전환하기 위한 비용으로 쓰이지 않고 석탄투자를 지속적으로 감행한 한전의 적자를 막는데 쓰일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LNG 수급에 문제가 생길 경우 연료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석탄발전의 가동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연 가정의 전기요금을 올린다고 해서 얼마나 탈탄소로 연결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권력의 힘의 논리는 관성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후운동이 성공하려면 바로 이 기득권이 공유재를 마음껏 탐nik하고 가로챈 힘의 논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발현된 것이 기후정의이고 체제전환이다. 대한민국은 체제전환이라고 하면 바로 체제전복과 연결시키는 아픈 뇌회로를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는 이를 떨쳐낼 용기가 필요하다. 체제전환이란

어렵고 두려운 용어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건 아닌데..’라고 모순을 인식하게 만든 기저에 깔린 정의로운 마음의 발현이다. 지금까지 가열차게 벌여왔던 활동을 이끌어 낸 마음 저 밑에서부터 나오는 개념이고 철학이다. 아프고 망가진 몸을 근본적으로 되살려내려는 몸살림 운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정의와 체제전환을 많은 활동가들이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느끼는 이유는 그 상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기후정의와 체제전환이 실현되었을 때의 구체적 상에 대한 논의가 쏟아져나와야 한다. 세계 유일 탄소중립국이며 GDP하위권임에도 행복지수 세계 1위인 부탄의 경우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사망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부탄의 원동력은 '공공의 신뢰'와 함께 '무상의료' 시스템이었다고 한다. 행복한 나라 8가지 비밀이라는 책은 "인간의 본성인 질투를 분출하게 하는 행복의 주제는 불평등이다.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려면 불평등 해소를 모든 정책의 일차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헬조선에서 행복 대한민국이 되려면 '성장 중독'에서 벗어나 '국민행복'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애써 계급 투쟁이라는 개념을 지우고 '행복이라는 대중적 용어로 접근하고 있지만 1960년대 이후 사회적 담론을 지배해온 '성장지상주의'와 물질주의, 집단주의의 횡행, 협동과 공동체의 미학마저 사라지고 살벌한 경쟁과 각자도생의 사회로 전락하게 만든 계기가 된 1997년 IMF. 공정으로 포장된 능력주의가 난무하고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로 급격히 추락한 '헬조선'의 모습을 저자도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자연에 대한 착취를 멈추고 90%의 국민이 모두 행복한 공공 재화투자(기본소득, 주4일제 등)에 힘쓴다면 재생에너지 갈등으로 지체되는 기후위기 대응의 시간보다 더 빠르게 탄소배출을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물론 소득 상위10%와 대기업이 무너지면 개인도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저항의 속도도 만만치 않을테지만 성장이라는 마약을 끊고 치료에 들어가야하는 시간이다.

5. 내후년 총선까지의 기후운동/정치의 전략은 무엇인가?

지난 대선에서 기후위기 인식조사 때 국민 10명 중 9명 “심각” 하다고 여김에도 불구하고 “선거공약으로 관심”은 4.3% 불과했다. 가장 관심 있게 살펴볼 공약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1순위는 지역 경제성장 공약(35.7%)이었다. 30년 내 풀어야 할 과제엔 1순위였으나 먼 미래의 일로 느낀다는 세계일보 설문결과였다.

앞으로 경제위기는 지금보다 더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해결책은 늘 그랬듯이 민중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으로 풀 것이다. 이것이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않고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익집단들의 행태에서부터 나온 것임을 알리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재)상향, 탄소성장법

폐기와 기후정의법 제정, 재생에너지 보급, 탈석탄과 내연기관차 전환 목표 재설정, 토건 프로젝트 전면 중단 등을 공약화하는 후보를 당선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지금부터 알려나가야 한다.

룰라가 브라질 대통령에 재선되자 세계 열대우림의 52%를 품고 있는
브라질, 인도네시아, 콩고민주공화국 3국이 열대우림 보존을 위한 동맹 구축에 나섰다고 한다.
룰라는 아마존 우림의 불법 벌채를 근절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선거의 중요성은 대한민국도 현재 심한 열병으로 체감하고 있다. 물에 물 탄 정권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공약을 원칙적으로 이행하는 후보가 필요함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지역의 토건사업에 앞장선 의원, 기후위기대응에 애쓰고 있는 후보 목록들을 정리해 정기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려나가는 작업, 우리가 요구하는 기후위기대응 공약을 내세운 가상의 후보를 대중에게 평상시 노출시키는 작업, 기후정의조례제정 운동 등 기후선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논의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진행해야겠다.

서린 / 노동당(진보정당들 논의 종합)

924기후정의행진을 계기로 새롭게 떠오른 기후정의운동 안에서, 진보정당들이 대안 정치세력으로서 앞으로 많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요청했다고 생각한다. 토론회 패널 제안을 받고 진보4당 기후 담당자들이 한 테이블에 모였다. 각 정당별로 짧게 924기후정의행진에 대한 당내 평가를 나눴고, 초벌 수준으로 아래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가볍게 나눴다.

1. 지역/시민/노동현장 조직화 전략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노동현장의 기후정의, 학교의 기후정의, 동네의 기후정의, 지역의 기후정의를 찾아나서야 한다. 가령, 미국의 선라이즈 무브먼트, '맘스 클린에어 포스', 남미 원주민운동과 같은 운동을 조직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와 같이 진보정당의 지역시도당은 기후정의운동을 중심으로 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대중 접촉형 조직화 방식을 보다 전략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

2. 연대체 운동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지금까지 진보정당은 연대체 안에서 이름을 올려놓고, 집회에 깃발을 들고 참여하거나, 발언을 하거나, 성명을 내거나 하는 활동을 주로 해왔다. 이제는 단순히 참여를 넘어서 어떻게 운동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인지, 진보정당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생각 할 필요가 있다.

3. 거버넌스 전략/태도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미응답)

4. 기후정의 및 체제전환의 상은 무엇인가?

기후정의는 탄소배출을 야기하는 화석연료시대를 끝장내는 요구이자, 계급, 성별, 인종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 권력불평등과 억압체제에 맞선 민주주의 투쟁이기도 하다. 근본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전환을 위한 핵심 투쟁의 전장이라고 생각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고 물질 생산과 소비의 규모를 줄이는 일, 주거·에너지·교통·통신·정보 등 기반시설의 소유와 운영을 공공화·공유화하고 공공서비스를 탈상품화하는 일, 노동권과 복지를 확대하고 노동조합을 강화하는 일, 배제되고 차별받던 존재를 존중하는 경제와 사회를 만드는 일 그리고 핵심적으로는 대안 권력을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기후정의는 하나의 개별 요구가 아니며, 정책 도입으로 실현 가능한 일도 아니다. 지금 당장 시작되어 장기간 지속해야 하는 혁명이자 정치적 프로젝트이다. 그러니 위해선 자본주의 체제전환을 지향하고 대안 정치세력으로서 등장한 진보정당들은 기후위기 시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투쟁의 핵심으로써 기후정의운동을 벌여나가야 한다.

5. 내후년 총선까지의 기후운동/정치의 전략은 무엇인가?

924기후정의행진과 새로운 기후정의운동의 흐름을 통해서 그동안 민주당 언저리에 머물렀던 환경운동의 한계를 넘어서서 진일보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진보정당들은 이러한 흐름을 어떻게 확장 시켜나갈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후정의운동에 많은 진보정당 당원들이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역에서 진보정당들이 어떻게 지역과 노동자들을 이 운동에 끌어들이고 확산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가령, 진보당의 경우 농촌파괴형 태양광 반대운동을 통해 에너지 공영화 공약으로 승화한 박형대 의원의 당선 등이 있었다. 이런 기후정의 운동의 성과의 사례들을 풍부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2024년 ‘기후정의 총선’을 만들기 위한 후보전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진보정당 안에서 기후정의 정치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4년 이후 ‘기후정의 대선 후보’를 만들기 위한 기획까지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런 기획은 선거 때가 닥쳐서는 불가능하고 지금부터 신뢰를 쌓고 스토리와 맥락을 만들어야 가능하다. 이번 계기로 모인 진보정당 기후 담당자들이 기후연설회의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서 앞으로 꾸준히 내후년 총선까지의 기후운동 정치의 전략을 주제로 한 토론회 등 기후정의 정치 전략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김석 / 민주노총

1. 지역/시민/노동현장 조직화 전략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 민주노총은 의결기구 결정을 통해 올해 9·24기후정의행진에 사상 처음으로 조직적, 대중적인 참여를 이끌어냈으며, 당일 6천여 노동자가 행진을 통해 9·24행진 집회에 결합하였음. 당초의 예상과 기대보다는 조금 저조하였지만, 조직적, 대중적 참여 그 자체가 나름의 유의미한 성과였다 볼 수 있음.
- 많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당일 기후정의행진과 집회의 성격을 이해하고 공감했으며, 조직적 지침 아래 상당수 조합원들은 종이상자 등으로 직접 기후정의에 대한 자신의 뜻을 밝히는 피켓을 만들어오기도 하였음.
- 그러나 이것이 기후위기, 기후정의에 대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대중적 인식 수준을 직접적으로 표상하는 것은 아닐 것임. 여전히, 기후 문제를 자신의 직접적인 과제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에 따른 실천행동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쉽지 않음.
- 무엇보다도 노동현장에서 기후 문제가 주요한 의제 중의 하나로 다뤄지고 있는 사례가 폭넓게 확인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 즉 노동조합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활동으로서의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쟁취에 기후 문제가 핵심 영역으로 아직은 자리잡고 있지 못한 것. 또한 노동 과정에 대한 개입력 확보라는 측면에서의 현장 활동 전반에 기후 문제가 대중적이고 조직적인 의제로 부각되고 있지 못함. 최근 이상 기후 대응의 측면에서 노동안전 차원의 접근이 이뤄지는 사례도 있지만 기후위기라는 프레임 하에 인식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 민주노총은 녹색단협운동을 통해 산업별 노조와 단위 현장 모두에서 노동조합의 가장 본질적인 사업으로서의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에 기후 문제를 주요 영역으로 상정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사업을 펼치고자 하고 있음. 노동자들의 노동현장 요구가 집약되어 제시되는 단체교섭 요구에 기후위기, 기후정의 문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은 물론, 단체교섭 요구 전반의 주요한 준거들로서 작동하여야 할 것임.
- 하지만 몇 가지 한계가 노정될 수도 있음. 무엇보다도 조합주의적 경도 가능성일 것임. 공동체적 요구, 본질적 요구와 조합원 대중의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요구가 상충될 가능성은 상존하며, 많은 경우 노동조합의 특성으로 인해 조합주의적 편향을 보일 수도 있는 것. 총노동으로서의 요구, 산업별 요구의 부각이 그래서 매우 중요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체제, 시스템에 대한 대응과 요구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 또한 조합주의적 한계를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경로 중의 하나는 지역

활동일 것. 즉 공동체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공동체의 요구와 현장의 요구가 다르지 않음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한 지역 활동과 지역 사업에 단위사업장 노조와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를 위한 대중적 조직화와 제도적 틀 구축이 함께 가지 않으면 안됨.

- 두 번째는 조직 노동자 중심의 접근에 매몰될 우려일 것. 노조 조직률 10% 내외인 상황에서, 단체협약 적용률 역시 미미한 상황에서, 단협 중심의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기후정의가, 정의로운 전환이, 비용을 '감내'하고 '전가'할 수 있는 이들만으로 축소될 수는 없으며, 이는 결코 정의로울 수 없음.
-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는, 정의로운 전환의 요구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 노조법 2, 3조 개정,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등의 노동 관계법 개정 요구는 한편으로는 조직 노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기후정의, 사회정의에 역할 할 수 있게 하라는 요구이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다수의 미조직 노동자들에게도 정의로운 전환 쟁취를 위한 최소한의 수단을 보장하라는 요구에 다름 아님.

2. 연대체 운동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 9월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수백개에 달하는 각양각색의 시민사회노동단체와 조직, 모임들이 함께 꾸린 연대체였음. 조직의 위상과 규모, 역할과 분야도 각각 다른 이들이 함께 모여 기후정의를 이야기하고, 대중적 결집을 이뤄냈음. 그 자체로 커다란 성과. 이 성과를 유실시키지 않고 지속적인 운동 역량으로 가꿔가는 것이 당연한 과제일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성격의 연대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정도의 공통적인 요구와 그에 기반한 다양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어야 함. 하지만 조직위는 이러한 기반 위에서 출발하지는 않았음.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기후위기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하고 전면화하기 위한 대중적 조직화가 필요했다는 점, 최근 몇 년 사이 기후 문제의 대중적 부각과는 달리 퇴보하거나 탈색되고 있는 정부와 자본의 대응에 맞선 보다 강력하고 규모있는 대중적 결집이 요구되었다는 점 등이 조직위의 구성과 운영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임. 9·24기후정의행진이 이러한 성격의 집회가 일반적으로 조직되는 방식인 전국 동시다발이 아니라 전국 서울집중으로 준비되었던 것도 하나의 방증일 것임.
- 또한 기후위기비상행동 내의 논의가 보여주듯이 2019년 당시만 해도 비상행동이 기후위기 대응, 기후정의 요구에 있어서의 대표적 연대체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었고, 비상행동과 이에

준하는 지역 비상행동들이 9월 말 기후 집회를 조직하는 것에 무리가 있거나 큰 이견이 제시되지는 않았음. 그러나 기후 운동에 있어서 다양한 입장과 실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는 기후 운동의 확장을 보여주는 성과이기도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9·24기후정의행진은 상기한 상황들로 인해 단일한 조직체계 속에서 추진되었던 것. 이러한 상황이 내년 이후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

○ 하나의 큰 목소리를 내는 크고 단일한 연대체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요청될 수 있지만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닐 것. 오히려 다양한 실천과 행동들에 공간을 열어두는 것도 일정한 의미가 있을 수 있음.

3. 거버넌스 전략/태도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 기후위기 대응이 시급한 전사회적 과제, 전지구적 과제라는 점에서 이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그에 기반한 자원과 역량의 집중이 요구될 것.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를 구축하기 위한 거버넌스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를 사회적 합의 기구로 일컬을 수도 있을 것.

○ 그러나 현재의 한국 사회정치체제 내에서 이러한 사회적 합의 기구의 구성과 운영이 제대로 성과를 만들어내오지 못한 것이 현실. 사회적 합의 기구 자체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제기된 것이 아니라 정권 또는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적 필요성에 기반하여 제기되었던 것이 대다수 일 것. 사회적 합의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을 갖고 싶었던 것이며, 이를 통해 이견의 무마, 저항의 약화를 기도했음. 대표적인 ‘사회적 합의’ 기구로서의 노사정위원회나 경사노위, 나아가 최저임금위원회 등 역시 필요로 했던 것은, 그에 기반하여 정권 또는 지배계급의 요구를 사회적 합의로 포장할 수 있는 ‘절차’와 ‘명분’이었음. 예컨대 ‘노사정’의 한 축으로서의 ‘노’가 없어도, ‘노’의 대표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강제되었음.

○ 사회적 합의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주요 행위자 간의 신뢰가 전제될 수 있거나, 혹은 행위자 간, 또는 계급 간 역관계가 일정한 균형을 이를 수 있어야 할 것임. 하지만 현재의 한국 사회정치체제 내에서 이는 아직 현실적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함.

○ 문재인 정권에서 만들어진 탄소중립위원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윤석열 정권의 기구 역시 상기한 한계를 뛰어넘지 못할 것으로 보임. 절차적, 형식적 과정을 넘어서는, 의례적 자문이 아니라 실질적 합의를 도출하고 강제할 수 있는,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거버넌스가 단시일 내에 작동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현재로서는 이러한 거버넌스가 가능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핵심적 조건 중의 하나일 기후 대중운동의 시급한 강화가 필요할 것.
-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에 비추어 일정한 거버넌스 참여를 통해 개입력을 확보하고 제한적으로라도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될 수 있을 것임. 틀림없이, 이러한 참여나 이를 통한 개입, 현실적인 일부 개선도 의미가 있을 수 있음. 하지만 일부 개선만큼이나 혹은 더 심각한 정도로 대중운동의 약화, 대중의 수동화 또는 대상화, 정권과 자본의 기후부정의적 활동 공간 확장 등의 부정적 후과가 클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할 것.

4. 기후정의 및 체제전환의 상은 무엇인가?

- 기후위기 및 기후위기 대응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이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기후위기에 책임이 있는 이들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 기후정의의 핵심 내용일 것.
- 노동자, 농민, 선주민, 지역 공동체, 지구적 남반구 등까지 기후위기와 기후위기 대응으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이들 모두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획과 집행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이들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기도 하며, 기후위기와 기후위기 대응으로 인한 이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공동체적으로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
- 이것은 대자본이나 주요 산업국가 등 기후위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이들이 기후위기와 기후위기 대응의 비용을 제대로 부담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할 것.
- 또한 기후위기의 피해, 기후위기 대응으로 인한 영향의 경험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이고, 미시적이지만, 해당하는 개별 현장과 업종, 지역, 국가를 넘어서는 해법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음. 결국 체제에 대한 이야기, 체제 전환에 대한 요구가 제기될 수밖에 없음.
- 체제 전환은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의 해법으로서 구조적 변혁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 현재의 사회경제체제로서의 지구적 자본주의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으로만 '매몰'될 필요는 없을 것. 틀림없이 자본의 이윤 추구가 우선적으로 고려, 보장되고, 필요한 기술 발전, 생산력 발전이 자본의 이익에 종속되는 자본주의 시스템, 기후위기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이들이 제대로 대변되지 못하는 대의 체계 및 국가간 시스템 등의 본질적 변화가 필요함. 하지만 구체적 해법과 이를 위한 구조 변화가 체제 전환과 유리되어 이야기되어서는 안될 것.

- 기후정의, 정의로운 전환, 체제 전환 등의 상을 제시하고자 할 때 무엇보다도 국제주의적 접근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되며, 국지적인 차원을 넘어 전사회적, 나아가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함께 고려되고 적용되지 않으면 안됨. 기후위기 자체가 개별 지역, 개별 국가의 대응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제주의적 접근 없이는 이른바 '사다리 걷어차기'를 벗어나기 힘들고, 전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해법 중의 하나로서의 생산력의 전지구적 재분배를 상정하기도 힘들기 때문일 것임. 최근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 위기 국면 속의 개별 국가들의 에너지 전환의 퇴행은 그러한 사례 중의 하나.

5. 내후년 총선까지의 기후운동/정치의 전략은 무엇인가?

- 현재 정치권의 기후 문제의 선차성에 대한 인식은 높지 않은 편으로 보임. 최근 몇 년 동안 기후 문제가 부각되고 여러 정치인과 제도권 정당들이 기후 공약을 내세웠지만 실질적 공약 이행이나 정책화는 여전히 미뤄지거나 완화되고 있는 상황.
- 무엇보다도 기후정의를 핵심 요구 중 하나로 전면에 내세우는 대중운동의 강화가 필요함. 기후정치 세력화라 일컬을 수 있을 정도로, 기후위기의 일차적, 우선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제반 세력, 기후정의 감구성을 견지하는 다양한 세력들의 결집이 요청됨. 대중운동의 강화, 대중적 결집이 제도적 틀 내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제도적 제약에 얹매일 필요는 없음.
- 기후정치 세력화를 토대로 기후정의 플랫폼의 구축까지 나아갈 수도 있을 것. 정치권의 기후정의 정책과 공약의 현실화를 대중적으로 압박하는 플랫폼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9월 기후정의행진 조직위 수준에 필적하거나 이를 넘어서는 결집이 필요할 것. 총선 전부터 상당 기간의 준비가 필요하며, 2023년 9월 기후정의행진(?) 조직화는 이를 위한 일차적 토대가 될 수도 있음. 또한 상기한 바와 같이 제도적 한계를 실천적으로 돌파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자원과 역량의 집중과 결집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배여진 / 기후솔루션

1. 지역/시민/노동현장 조직화 전략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지금의 기후운동은 논의도 움직임도 지역/시민/노동현장이 함께 하고있지 않음. 오랫동안 논의되어온 석탄발전과 관련된 지역과 노동현장의 움직임과 논의가 함께 되며, 석탄발전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나 인지도 역시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높음. 하지만 석탄발전에서의 논의 역시 노동현장에 대한 논의가 거의 대부분임.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사업의 노동현장까지 함께 해야하며, 해당 노동현장과의 적극적인 공감대 형성과 연대가 필요함.

에너지를 소비하는 지역이 있고 생산하는 지역이 있으며, 산업단지나 발전소 같은 사업장이 있는 지역이 있음. 또, 기후위기의 피해를 더 많이 실감하는 지역이 있으며, 비교적 둔감한 지역이 있음. 성별과 연령대의 분포, 소득수준이나 소비 특징 등 다방면으로 지역의 특성을 잘 구분하여 ‘기후 위기’에 대한 홍보 전략을 달리해야 함. 지역 운동은 ‘공동체’가 나뉘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대규모 시설이 있는 지역은 나뉘어진 공동체의 감정을 잘 정리하며 활동을 시작할 필요가 있음. 지역에서의 운동은 무엇보다 쉽고 선명한 목표가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이 참여할 경우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잘 사용해야함.

시민 개개인의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도는 전보다 높아졌고, 그만큼 심각성에 대한 인지도 같이 높아졌음. 하지만 높아진 관심도나 심각성 인지도에 비해 ‘참여’는 낮음. 현재 ‘기후 운동’은 ‘우리들만의 리그’에서만 진행되는 기후 운동으로 많이 보임. 시민 개개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후 운동’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으며, 기후위기를 알리고 설득하는 활동도 많아져야함.

2. 연대체 운동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석탄을넘어서 등 연대체가 많이 형성되어있음. 각 연대체의 목표가 각자 다르고 다양할 것. 각각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각자의 분야에 집중해서 활동하면서도, 열려있어야 함. 지금의 연대체 운동은 열려있는듯 하지만, ‘외부’라고 생각되어지는 집단이 참여하기 쉽지 않음. 시민, 다른 목표나 집단을 가진 집단 등과 섞이기 어려움. 접촉이 비교적 적었던 집단과 꾸준히 접촉하고 소통하며 같은 경험을 쌓아나갈 수 있는 연대체 운동이 넓어져야 함.

3. 거버넌스 전략/태도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미응답)

4. 기후정의 및 체제전환의 상은 무엇인가?

온실가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빠르게 감축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이라도 줄여나가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며, 지구 생태계는 사람 외의 많은 존재를 포함하며, 모두를 위해 빠르고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함. 또한,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기후위기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온실가스를 배출한 오염자 역시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임. 차등을 두지 않고, 이념을 생각하기보다는 지구 생태계를 생각하며 기후 운동을 해나아가야 할 것.

‘정의’를 다른 집단을 배제하는 기준으로 삼지 않고, ‘같이’할 수 있는 방향을 더 고민해야 함.

5. 내후년 총선까지의 기후운동/정치의 전략은 무엇인가?

기후, 특히 에너지 이슈에 집중하여 현장이 있는 지역과 연대하여 활동할 것. 지금까지는 ‘석탄발전’에만 활동이 집중되었다면, 이외에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다양한 에너지원과 사업장에 대한 활동을 할 것. 그리고 관련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환경 및 시민단체 또는 주민조직과 연대하여 활동하고 지역에서의 이슈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것이 주요 전략임.

온실가스 배출 원인과 배출량, 그리고 그 외의 오염 등을 명확히 구분해내고, 정치/행정/시민/시민사회 또는 비영리단체/연구소 또는 전문가 등이 각자 어떤 역할을 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같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나눌 수 있게 꾸준히 소통할 것.